

# 제346회 국회 (정기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0월28일(금)

장 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업무현황보고
  - 가. 기획재정부
  - 나. 교육부
  - 다. 미래창조과학부
  - 라. 산업통상자원부
  - 마. 고용노동부
  - 바. 방송통신위원회
  - 사. 공정거래위원회
  - 아. 금융위원회
  - 자. 중소기업청

### 상정된 안건

- 1. 업무현황보고 ..... 2
  - 가. 기획재정부
  - 나. 교육부
  - 다. 미래창조과학부
  - 라. 산업통상자원부
  - 마. 고용노동부
  - 바. 방송통신위원회
  - 사. 공정거래위원회
  - 아. 금융위원회
  - 자. 중소기업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346회 국회 (정기회) 제4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그리고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9월 13일자로 새누리당 윤영석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추경

호 위원님께서 보임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추경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정동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계신 대로 윤영석 위원께서 ‘대표비서실장으로 옮기시면서 업무상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 일정상’ 해서 제가 다시 보임이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배우면서, 요즘 최고 화두는 어쨌거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는 데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영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를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업무현황보고

가. 기획재정부

나. 교육부

다. 미래창조과학부

라. 산업통상자원부

마. 고용노동부

바. 방송통신위원회

사. 공정거래위원회

아. 금융위원회

자. 중소기업청

(10시05분)

○위원장 정동영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기획재정부 등 9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요즘 국민들 나라 걱정이 큼니다. 국가적 혼란 속에 우리 경제는 수출도 부진하고 생산·소비·투자 3요소가 다 미약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의 과제 또 청년실업의 문제, 가계부채의 폭발성 그리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 어느 것 하나 마음 놓을 수 있는 요소가 없는 참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한 사전준비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기획재정부 등 9개 기관의 업무현황 보고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의 미래와 미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깊은 통찰과 정확한 진단 그리고 필요한 정책대안들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5개 기관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상, 즉 계획도 포함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특히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미래 일자리 대책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질의는 보고가 모두 끝난 뒤에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가 대신…… 차관이 못 나오신다고 했는데 오셨군요.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그리고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최상목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영 간사님, 최운열 간사님, 오세정 간사님, 그리고 여야 위원 여러분!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며 취업자가 늘고 있지만 경기 부진과 일자리 미스매치로 실업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용 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2020년까지 710만 개의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는 200만 개에 그치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저숙련 일자리는 물론 중간숙련 일자리까지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엄중한 상황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청년들의 고용 애로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첫째,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확대 재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한 세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청년고용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일자리 중개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하는 노동개혁, 창의형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개혁, 신산업과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산업개혁, 일자리 창출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미래 일자리 창출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 입법이 절실합니다.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 입법에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지금 고용시장 동향 및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을 앞에 제가 인사말씀 드린 것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고용동향입니다.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부터 고용률이 40개월 연속 상승을 하다가 올해 들어 가지고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서비스업 고용은 호조세입니다마는 제조업 고용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의 실업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은 2011년 이후 비정규직 비중은 하락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비정규직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여전한 상황입니다.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하고 여성을 보면 청년의 경우에는 최근에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이 하락되고 그다음에 일·학습 병행이 확산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 지속 감소했던 청년 취업자가 201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고용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아직도 고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그렇지만 고용률과 경제

활동참가율 그리고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외환 위기라든지 금융위기 때 고용이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 일·가정 양립 문화와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 확산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고용 트렌드입니다.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WEF의 분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20년까지 세계 15개 경제권에서 일자리가 500만 개 순감 예상됩니다. 업종별로는 중간숙련 일자리까지도 대체가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창의성을 요하는 일자리는 증가할 예상입니다.

국가별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에 따른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되기 때문에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 인프라, 법체계를 갖춘 나라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UBS의 분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은 140개국 중에 25위입니다.

주로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취약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숙련도, 교육 시스템 등이 낮은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순위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법률·교육 등 고숙련 서비스업 발전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대체될 위험이 높은 일자리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자리 상황이나 미래 트렌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추진 방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전 세계가 지금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과 미래 트렌드 대비가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은 당연히 경제 전체가 활력을 제고해야 기업의 고용 여건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부는 재정과 통화, 부문별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시적으로는 고용친화적인 예산과

세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16년 대비 1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심층평가를 통해서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제의 경우에는 일단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여기에는 지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세제 지원에 대해서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업종의 62%가 원래는 지원대상이었는데, 지금 99%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이나 임금인상에 대한 그런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도 지금 세법 개정안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일자리 연계와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에서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중개인 역할을 강화한다든지—이따 고용부나 다른 부처에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그리고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신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4대 구조개혁, 특히 노동개혁의 어떤 노동개혁 4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개혁, 그러니까 산업개혁을 통한 신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미래 일자리 창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규제개혁특별법의 제정으로 신산업 투자에 대한 애로 해소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의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이 2016년 대비 17년이 한 39%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제의 경우에는 신산업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를 하고, 금융의 경우에도 신산업 육성펀드를 통해 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유망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을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법 제정이 되지 않았지만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도 저희가 발표해서 이것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노력으로 저희가 현재 일자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위의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내용들을 보완해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영 다음은 교육부 이영 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부차관 이영입니다.

오늘 이준식 부총리께서는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다는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부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근 대학정책실장님이십니다.

송용배 대학지원관입니다.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추진 배경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창조경제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나 한국은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으로 그간 추격형 전략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 관련 일자리는 감소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분야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어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대졸자 등 고학력 인력공급은 계속되고 있어서 청년 취업난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3쪽, 추진전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습니다.

첫째, 창조경제시대를 견인할 창의·융합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그간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융·복합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을 갖춘 창의·융합인재의 양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둘째,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하여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하고 교육과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산학협력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창조적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미래세대를 양성하겠습니다. 학교가 학생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학생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의인재 양성과 기술개발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에 걸친 진로와 경력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4쪽에는 비전과 목표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정리해 났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세 가지 분야 중에 첫 번째 분야, 창의·융합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하고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겠습니다. 올해는 자유학기제가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생참여 중심의 수업과 과정 중심의 평가가 확산되는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로 4차 산업혁명과 아주 잘 부합되는 변화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일 반고에 진로 집중학년·학기제를 시범 운영하여 자유학기제의 성과가 공교육 현장 전반으로 확산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안착시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통합적인 사고력, 문제해결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학생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하는 내용입니

다. 실제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굉장히 부합되는 내용으로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는 2017년, 중학교·고등학교에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수, 교과서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셋째, 신산업 분야에 대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될 계획입니다. 올해는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로 900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과 실습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이것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입니다. 현장중심 직업교육과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산업분야별로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해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발굴하고 특성화고 지원을 확대하여 2017년까지 취업률을 50%로 상향하여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올해 60개교에서 내년 200개교로 확대하고, 중등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중이 현재 19%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학습병행제를 내실화하고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모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넷째, 후진학자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성인 학습자의 학위과정과 평생교육과정을 전담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째, K-MOOC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성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약 14만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점인정과 학점교류를 확산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입니다. 대학의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체계 구축입니다.

이 분야 첫 번째 과제입니다. 교육부는 대학교

육과 사회 수요 간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미래 유망 분야와 사회 수요를 반영하여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산업 연계 교육활성화 선도사업, 속칭 PRIME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1개교를 시작으로 우리 대학이 지식을 창출하고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질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아울러 대학 인문역량 강화, CORE사업을 통해 인문학적 사고력과 통찰력, 문제해결능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둘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산학협력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LINC)사업입니다. 이 LINC사업을 통해 대학별로 특화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유도하고, 기술개발과 이진을 통해 교육과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으로까지 연계하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내년부터 64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참여 학생을 2만 500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대학별로 종합적인 진로·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21개교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진로, 취업, 실제로 창업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내년에는 대학별로 다양한 형태의 현장 적합성이 높고 통합적인 진로, 취·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문화가 확산되도록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여 대학생·대학원생·대학교원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창업휴학제와 같이 창업친화적인 학사제도 개편을 유도하고, 창업 단계별 교육을 체계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공학교육인증제 참여유인을 제고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학교육과정으로 개선하고,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여성공학인재가 유망 공학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공대 교육과정 개편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실제

배부한 자료의 뒷부분에 상세한 내용들을 첨부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안녕하십니까?

장관님께서도 예결위 그리고 차관께서는 지금 미방위 예산심사소위가 있어서 창조경제조정관 대신 보고하게 된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미래부가 많은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을 통한 청년 일자리 지원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 주요 성과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와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10월 중순까지 3102개의 창업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35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센터의 보육기업인 닷(dot)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워치를 개발하여 10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의 기능입니다.

혁신센터를 통해 새롭게 창출된 인력수요에 맞는 인력의 양성과 매칭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국 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하여 청년 일자리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존은 크게 세 가지—일자리의 중매자, 취·창업의 트레이너, 인재 인큐베이터 그리고 고용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인력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매칭 전략을 통해 구직자를 기업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10월 중순까지 2455명의 청년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계하고, 8918명에게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금년 세운 목표 대비 약 9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쪽, 고용존 주요 사업 추진경과입니다.

전국 17개 고용존에서는 청년 채용의 날, 고용

디딤돌 등의 기본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센터별 여건과 특성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 등 총 2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과 기업이 충분한 대면 기회를 갖고 100% 면접 그리고 면접 피드백을 제공하는 청년 채용의 날을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97회를 개최하여 150개 기업, 1487명의 구직자가 참여했으며, 261명이 채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스타트업에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청년인재 매칭을 청년희망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개 기업, 695명의 구직자가 참여하여 총 165명을 최종 채용으로 연결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 산업계의 우수 훈련인프라와 재직자 교육을 활용하여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9개 기관에서 125개의 과정을 운영 중이며, 총 5222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이 중 834명을 취업으로 연계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별 여건과 혁신센터별 강점을 반영한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바이오벤처 전문인재 매칭, 경북의 스마트팩토리 고용예약 등 총 59개 특화 교육훈련을 통해 현재까지 3696명을 교육·훈련하고 87명을 채용으로 연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별 유관기관 협업을 통하여 정보 확산, 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실시하는 청년고용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고용존의 향후 계획 분야입니다.

먼저 창업과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현재 그 기능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고용존을 중심으로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수요에 맞추어 개발자, 디자이너, 소공인 등 전문인력을 온라인상에서 매칭할 수 있도록 창·취업 동시지원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IoT, AI 등 전략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청년혁신가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함으로써 신산업 특화 인재 양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의 직무와 미래 수요 전망, 지역 구

직자 역량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관리를 통해 매칭 기능을 보다 고도화하고 금년도 운영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더욱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고용존의 핵심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미래부에서는 조만간 지능정보산업의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AI와 IoT에 기반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동영 위원장, 이완영 간사와 사회교대)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조급성이나 행사, 문서 업무 등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혁신센터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4일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행정 업무의 최소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인력 증원 및 센터의 자체 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함으로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용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만기입니다.

오늘 되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부에서는 산업정책관 원동진 국장하고 박영삼 산업인력과장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커다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 나

가야 할 방향을 주로 업무현황에 담았습니다.

우리의 일자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저희는 3개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의 부상입니다. 다 아시는 바처럼 여기는 전통 제조업에서 우리의 일자리를 크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중국은 GDP 대비 제조업 생산·수출 비중이 세계 1위가 됐고, 특히 주력 산업에서 물량·시장 규모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크게 위협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중 조강능력 같은 경우에 중국은 2001년 1억t이었는데 우리는 그때 5000만t이었고, 그런데 그게 2015년에 중국은 11억t, 우리는 0.9t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철강 과잉 공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렇게 많은 조강능력이 내수가 다 채워지다 보니까 전 세계 철강 시장에 밀어내기를 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 같은 경우도 중국이 2500만 대 정도 생산을 하면서 내수시장 사업 확대 규모가 이제 다 새추레이션(saturation)이 되고 나면 그 생산된 자동차가 또 세계 시장을 위협하면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갈 위협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국의 총 취업자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어섰고요. 매년 5.8% 정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통 산업에서 우리의 일자리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저희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빨리 해서 여기에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트렌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량생산·자동화·유연생산을 대체하는 새로운 소비자 맞춤형 1 대 1 생산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단순 사무직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에 수학·공학 등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일자리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의 위협이 아니라 또 선진국의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첨단제조혁신기반 구축을 통해서 중국으로 이전됐던 제조업의 일자리를 본국으로 회수 중에 있습니다.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나타나는데, 2010년 2월~2014년 6월 기

간 중만 보더라도 제조업 부분에서 65만 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고 그와 관련된 연관 일자리도 103만 개가 창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나갔던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이전 기업 중 미국 복귀 희망 기업 숫자도 2012년 37%에서 2013년, 14년쯤에는 한 54%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 결국은 선진국으로 일자리가 복귀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국의 위협도 받고 4차 산업혁명으로 선진국에도 위협을 받는 일자리 위기 시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자리도 미래가 밝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신기후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위협도 되지만 저희한테 또 기회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체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의무뿐만 아니라 에너지 신시장이라는 기회가 함께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2조 불 정도 규모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차 분야는 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이 구체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각국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산업에서만 2015년에 801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30년까지 2400만 개의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일자리를 확보해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약을 하면 중국의 도전에 대한 사업재편, 구조조정 가속화하는 것,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해서 선진국에 일자리 뺏기지 않을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일자리를 뺏어 와야 되는 것, 세 번째, 신기후체제에 잘 대응해서 일자리를 확보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 평가, 4쪽입니다.

주력 산업의 활력은 계속 저하되고 있어서 여기에는 기업활력법을 통해서 고부가와 신산업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4차 산업혁명 등 아까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우리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는 전체 수준은 25위이지

만 노동시장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인데 이 분야가 너무 저회가 취약합니다. 83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유연성을 확보하느냐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하느냐의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도 아직 경제성·인프라 등에서 미흡하고, 특히 여러 가지 산업을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규제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우리의 규제 틀이 너무나 강한 게 문제입니다. 노동 유연성은 경쟁국 대비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 진입규제, 제도의 부재 등으로 민간의 투자 의지를 꺾는 많은 규제가 있는 것도 빨리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 재편입니다.

공급 과잉 업종에서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해서 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적극 지원해 가면서 경쟁우위 분야에서는 전력, 도로, 용수 등 투자에 필요한 요소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인해서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를 해서 중국이 따라오는 것을 제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 유망 분야에서는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실력을 키워 나가면서, 특히 제조업 전반에 스마트공장을 확산해 나감으로 인해서 4차 혁명에서도 저희가 리드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지금 정부의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산업 창출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는 과감한 규제 개선 그다음에 이업종 간 융합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네거티브 규제라든지 인증 패스트트랙 도입을 해서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이라든지 제조업 파견 허용, 성과와 생산성이 연계된 임금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신산업 대응이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외에 R&D라든지 인력, 세계·금융, 판로 지원 등 프레임워크(framework) 환경을 유연하게 조성을 해 가면서, 이것들이 잘 되면 유턴 기업들은 미국에서 리쇼어링이 있듯이 자동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감면이라든

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환경이,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게 더 급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차, 에너지 신산업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업종 간 융합도 촉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에너지 신산업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020년까지 42조 원 정도를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이쪽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들 정식으로 인사시키세요. 아까 시간 때문에 가볍게 하시던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러면 일어서서 인사를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이완영 정식으로 한 분 한 분 인사……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원동진 국장은 산업정책국장이고 산업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을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 대응하는 팀을 맞고 있는 셈입니다.

박영삼 산업인력과장은 오늘 이 페이지 기초 작업을 해 준 친구인데요. 산업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대 국회에 우리 경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일자리 문제에 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범정부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노동부 간부를 소개해 드

리겠습니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입니다.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정책 여건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분야별 일자리 생성·대체뿐 아니라 고용 형태 및 일하는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선해서 미래 세대에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적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일자리 수요 변화입니다.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 대체와 새로운 일자리의 수요 발생이 활발히 일어날 전망입니다. 숙련 수준과 관계없이 정형화된 업무는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반면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직종, 의사소통, 감성 등 사회관계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 등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이 필요한 숙련 기술을 습득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모습의 변화입니다.

미래 사회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복수의 일자리 취업, 과업 단위 계약이 확대되는 등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화될 전망입니다.

프리랜서 등 비전형적인 고용 형태가 확대되고, 기업 조직은 핵심 기능 위주로 분화·특화되는 동시에 기업 간 네트워크는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글로벌 경쟁도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하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제도와 관행이 만연되어 향후 공정한 노무 규범의 정립,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기본방향입니다.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일하는 국민의 노동시장 적응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

니다.

첫째는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고숙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로자들이 일자리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평생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중단 없는 노동 개혁을 통해서 공정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보호 강화 그리고 취업 지원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에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능정보사회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인력수급 전망 및 통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인력수급 전망 시 자동화에 의한 대체, 신산업·신직업 예측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조사통계 인프라를 개선 및 확대하겠습니다. 또 노동시장 분석 기능을 고도화하고 고용통계 및 인력수급을 전담하는 조직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능정보기술 선도 고급인력 양성입니다.

빅데이터, IoT, AI 등 지능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 고급인력 양성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인력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직종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포함시키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급과정 운영기관에 대한 훈련단가 할증을 검토하여 보다 많은 기관들이 고급과정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공공 부문이 선도하여 지능정보기술 관련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IoT 등 응용서비스기획 등 신기술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추가로 개발하고 국가기술자격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성과 및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입니다.

직업훈련시장의 자율기제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한편 훈련생 선택에 의해 훈련 규모가 결정되도록 성과에 따라 훈련생 자부담을 조정하겠습니다.

또 정부지원금 이상의 수강료 책정을 허용하겠습니다. HRD-net을 통해 훈련기관·과정·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훈련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문 간 일자리 이동 촉진·지원입니

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차관님, 조금 더 단축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첫째, 평생경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직·재직·퇴직에 걸친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직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훈련계획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 ICT 역량 제고 및 융합 인재 양성입니다.

인문계 전공 학생, 일반사무직 재직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훈련 플랫폼 다양화입니다.

e-러닝, MOOC,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 등 다양한 훈련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취업 지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중앙·지방정부·민간의 일자리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능정보기술 기반 고용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취업정보, 훈련정보, 지원금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세 번째 과제인 공정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의 구축입니다.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근로시간계좌제의 도입과 활용,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능력 중심 인사관리 확립입니다.

NCS를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하고 직무성과에 따른 기업의 인사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중소기업 간 격차의 완화입니다.

원·하청 상생 협력을 위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상생협력기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임금 수준이 높은 주요 업종에서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을 배려하는 교섭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용 형태 다양화에 대응하는 고용안정 강화입니다.

공정한 노무제공 규범과 관행을 형성시키겠습니다.

불법파견 및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감독을 확대·강화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 그리고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 대상 업무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용안정망 확대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 및 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산재보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신설과 특고 기 적용된 6개 직종 외에 3개 직종을 추가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비정규직, 특고 등 취약계층에게 정보 획득과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입니다.

최저임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위에서 만든 이 책자 있지요, 우리 토론회의 제안에 대한 정부 측 검토의견 이것은 별도로 정부에서 보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만 마치면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그동안 토론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미리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 주셨다가 정부가 반대하거나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상임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상임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이 배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간 국회 미래일자리특위가 운영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현장의 애로사항이 다수 발굴되었으며,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빅데이터·IoT 등 신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는 제안 등

이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구현되는 초연결사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거나 생체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송통신의 공익성·공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기본으로 방송과 통신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방송통신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 제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현황 책자의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제언을 특위에서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 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물리적 소재지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도입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의견은 이 제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 이중규제 개선입니다.

신용카드 터치 본인확인 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와 방통위의 이중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이신데요. 지금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 업무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용정보법상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업무하고는 별개의 이중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양 기관 간

에 이미 협의를 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신용카드 터치 본인확인 서비스에 대한 도입 문제는 신규 대체수단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조속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법 간의 이중규제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은 이것을 수용하고 이미 조치한 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인정보법과의 정합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정·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에 형사처벌을 축소하고 시정명령 위주로 제재를 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은 이를 수용을 하고 지금 현재 지난 9월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인데, 그 주요 내용은 부정확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만 현행과 동일하게 형벌과 행정제재를 병과하도록 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만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벌 적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상임위원님, 5페이지 신용카드,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안 돼요. 지금 이미 수용 또 기초치 이렇게 해 놔는데 국조실 의견대로 이것은 이중규제가 아니라고 보고 의미 없다는 말인지, 개선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법적으로는 이중규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정부 차원에서 진입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보다는 훨씬 간편한 절차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그러면 개선계획 내용은 여기에 없다, 그렇지요, 어떻게 할 건지?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여기 향후 일정에 보시면 신용카드 터치 본인확인 서비스가 새로운 본인확인 대체수단이거든요. 이것을 이용하려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여튼 그 신청이 들어오면 조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그러면 금융위, 방통위 이중으로 안 하고 이제 방통위에서만 이렇게 나가는데 거예요? 해 주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그런데 그게

금융위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방통위에서 하는 것이 별개다라는 말씀이고요.

○**위원장대리 이완영** 상당히 어렵네. 우리 위원님들 들어도 헛갈릴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기관이 해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 군데에서 하도록 해야 개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신청을 방통위에 하면 저희가 조속히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정확하게……

그러니까 민원인이 두 번 안 가게끔 개선되도록 하는 그런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예.

○**위원장대리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사무처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 활력 있는 시장을 만들고 고용 친화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독과점 시장구조 및 경쟁제한 규제의 개선입니다. 자료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입 및 가격규제, 사업활동 제한 등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오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공공 분야의 독점과 신상품 개발 저해 등의 원인이 되는 규제 9건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독과점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금지 등 경쟁제한적 M&A를 차단함으로써 경쟁친화적 시장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시장감시 강화입니다. 자료 6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디지털시장 등 신성장 분야에서 경쟁과 혁신을 통하여 선순환적 시장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과점 사업자들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는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등 폐해를 초래하므로 감시 활동을 지속하면서 기업집단 현대 및 CJ 외에도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자료 10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먼저 하도급 분야에서는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 되고 고용 비중이 큰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자진시정 면책제 등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9월 말까지 약 1850억 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 희망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사회초년생이나 퇴직자가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존경하는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용범입니다.

오늘 예결위와 정무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어서 제가 금융위원장을 대신하여 금융권 일자리 동향 및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에 따라서 금융권 일자리 동향 및 전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 부문의 추진 현황 그리고 평가 및 향후 계획 순입니다.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 일자리 동향입니다.

금융권의 취업자 수는 2013년 86만 명 수준까지 증가한 후에 감소하여 2015년에는 79만 명 수준입니다.

은행 지점이 2012년 말 7800개에서 15년 말에 7400여 개로 감소하는 등 금융회사의 취업자 수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보험모집인 등 자영업 성격의 취업자는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입니다.

금융권의 고용 여력은 당분간 추세적인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등 온라인 기반 영업 강화로 점포 등 대면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업이 빠르게 진행 중인 유럽에서는 은행 지점이 우리보다 훨씬 더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권은 최근의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점 축소 등 비용 절감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영 간사, 정동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 부문의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금융권 자체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과 금융 부문이 자금중개 기능 개선을 통해서 실물 부문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점 방문 없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모든 은행 업무를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올 3분기까지 새로운 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268명을 고용했습니다.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빅데이터 관리·분석 등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과 해외 진출 등을 통한 금융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보험상품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서 보험계리사 등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인력 수요 증대가 기대됩니다. 기술금융 도입으로 기술신용평가사 등 기술금융 전문인력 채용이 증가하고 클라우드펀딩 도입으로 중개기관 14개가 신설되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 전문인력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독립투자자문업 도입 등으로 자산운용 분야 일자

리가 확대되고 있고, 주요 해외 금융 당국과 MOU 체결, 금융 인프라의 ODA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여 관련 인력 증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물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한 창업·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새로운 자금조달 체계 마련을 통해서 창업·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금융·클라우드펀딩·성장사다리펀드 등 금융개혁을 통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담보·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술금융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기술금융 대출 50조 원, 기술금융 투자 181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뛰어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진 창업·중소기업, 특히 초기 기업들도 클라우드펀딩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벤처·창업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책금융을 통한 창업·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문화·관광·의료·소프트웨어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성장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책금융기관들은 아무래도 과거에 제조업 기반으로 여러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성장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상담·컨설팅·자금지원 등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창업·중소·중견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향후 계획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IT 등 핀테크 발달,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으로 직접적이고 전통적인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새로운 금융직종 출현과 유망 신성장 산업,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독립투자자문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직 일자리가 창출되고 신성장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로 관련 분야에서 고용이 증대되며, 금융회사·인프라·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증가하고 인력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핀테크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실물부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 김형영 창업벤처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 김형영 먼저 중기청장은 예결위 참석, 차장은 산업구조조정 관련회의 참석으로 소관 국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창업벤처 선순환 생태계 관련 내용을 제안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 현황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청 업무 이외에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업무도 일부 포함돼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정책 현황 및 평가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벤처투자 규모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창업이 양적으로는 확대가 되었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인력 출신의 창업은 부족한 실태이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창업생존율 역시 낮은 수준입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혁신적 유망 창업 촉진입니다.

유망한 기술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TIPS 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맞춤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도약 기업을 대상으로는 사업모델 개선, 정책자금 융자, R&D 등을 종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망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국내외 엑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 등을 활용해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입니다.

민간자금의 자체적인 투자 선호가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모태펀드의 출자를 확대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해서 민간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벤처펀드 설립조건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M&A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의 기술인력을 불법적으로 탈취해서 M&A를 저해하는 행위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를 하였습니다. 창업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창업 후 3~7년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벤처투자에 대한 민간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 법인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투자제한규제 완화 등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서 기술혁신 M&A 요건을 완화하고 M&A 전용 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보고기관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위원장님, 이것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아까 안 하신다고 하기는 했는데 설명 좀 한번 하시는 게……

○**위원장 정동영** 질의에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자료 설명 좀 할 수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목** 해당 부처에 의견을 다 보냈거든요. 부처한테 직접 내용하고 답변 내용을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처별로 우리 지적사항하고 그에 대한 답이 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정동영** 지난번에 두 번의 토론모임에서 제기됐던 부분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9개 부처에 질의서를 보내서 그 답변이 온 거거든요. 일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 질의과정에서 다시 부처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질의방식은 일단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 하시고 또 보충질의 5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일곱 분이 신청하셨는데요. 질의 순서는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이영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PRIME사업이요, 산업계가 요구하는 그런 인력과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 사이에 미스매치가 크다, 그래서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서 학과, 계열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업이지요. 전체 사업 규모가 2000억이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래서 교육부 사업 중에서 가장 크지요, 대학재정지원 사업 중에서도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실제로 조금 더 큰 것도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최근에 새롭게 부상한 그런 과제로는 굉장히 큰 규모라서 많은 대학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런 만큼 또 부정적인 파장도 컸었는데요. 요즘 대학들이 재정 압박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 PRIME사업에 사생결단을 내면서 뛰어들었는데요. PRIME에 선정된 대학들, 럭키하게 선정된 대학들의 학과명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스마트은행체공학과’ 이런 것도 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양대 기획처장을 하셨으니까요, ‘서피스·인테리어디자인학과’ 이게 뭐하는 학과입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디자인하고 뭔가 공학적인 것을 합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한양대에 계셨고 기획처장님을 하셨는데도 이 제목을 보고 어떤 학과인지 감이 안 오시는 거지요? 저는 서피스(surface)라 그래서 공간의 표면만 하고, 여기는 공간 내부는 안 합니까? 참 신기하다는, 이 ‘서피스’라는 그런 명칭을 왜 여기다 결합시켰을까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이것 융합을 하라니까, 그리고 튀는 학과명이어야 과제에 선정되기 유리하니까 대학들이 고심을 해서 작명소가 된 거지요, 학과 작명소. 이 학과명을 봤을 때 어떤 분야를 다루는지, 기존의 어떤어떤 학과가 융합된 것인지 그래도 파악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참 기이한 학과명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버드대 홈페이지에서 공대 학과명을 찾아봤습니다. Applied Math 이것은 공대를 서포트하는 그런 학과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개입니다. Biomedical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Electrical Engineering 그다음에 Engineering Sciences, Mechanical Engineering, 이렇게 클래식하고 명칭이 단순하고 수시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학과명들은 없는데요. 저는 이게 PRIME의 폐해라고 봅니다.

미래학자들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직업의 변화가 매우 빠르다, 그래서 현재 상당수 직업이 사라지고 또 우리 학생들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는데요. 이 PRIME이 반드시 인문대 정원을 빼서 공대로 보내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조정을 해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는 시기를 대략 생각해 보면 올해 조정을 했으면 내년에 학생들을 받아서 4년, 또 대부분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앞으로 7년 정도 이후 사회가 되는데, 이 예측대로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산업별·직업별 인력 수급을 죽집게처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저는 드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또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온잡 트레이닝(On Job Training)을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대학에서 이 특정 직업에 맞도록 완벽하게 대비시켜서 내

보낸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학은 기본기를 충실히 닦아 주고, 그래서 평생 배워갈 수 있는 능력,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시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PRIME사업 추진 근거는 분명히 여기 있었지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학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서 공학·의약계열은 더 많이 필요하다, 나머지 전공은 현재 초과공급 상태다, 그래 갖고 그 예측에 의거해서 지금 교육부가 이 PRIME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미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된 지난 2005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대학에서 가장 많이 정원을 감축한 데는 인문·사회 계열인데요, 보시면 인문계열 입학정원은 9.7% 감소, 사회계열 6.6% 줄었고요, 자연계열 4.4% 감소, 의약계열은 이미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학계열도 9%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PRIME으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아도 이미 지난 10년 동안 공학·의약 계열은 늘리고 그다음에 인문·사회 계열은 줄어 왔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방위적으로 공학 전문가를 대체하게 된다, 그 대신 인간의 감정을 보살펴 주는 직업군이 크게 부상을 해서 인문학과 예술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학과정원을 바꾸실 거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미래 산업계 직업군이 어떻게 될지 정밀한 예측이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PRIME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셨을까……

또 아시다시피 대학마다 진통이 매우 컸습니다. 이게 어느 학과는 없애고 어디를 합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대학 내에 내분을 정말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됐으면 되는데 탈락한 학교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 학교들은 탈락하면서까지…… 그냥 대학을 이 PRIME사업이 뒤흔들어 놨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공학과 의약계열 취업률인데요. 공학계열이 인문계열에 비해서 현재 취업률이 높기는 하지만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학계열은 2011년하고 2014년 비교를 해 보면 2.8%포인트 하락했고, 의약계열은 3.5%포인트 하락해서 하락 폭이 그래도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이 맞는지

좀 회의적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학계열 학생의 비율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 2014에 따르면, 이게 2014년 건데 2010년 자료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학계열이 23.9%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국 31.4%보다는 낮지만……

○위원장 정동영 조금 더 주세요.

○박경미 위원 우리나라 공학계열이 2010년 기준으로 23.9%,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우리보다 높은 데는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저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2010년인데 지난 5년 동안에도 이미 공학계열은 늘리는 방향으로, 인문·사회 계열은 감소 방향으로 해 왔으니까 이 국제적인 트렌드에서 더 벗어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이렇게 대학 구조조정으로 어떤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PRIME사업을 계속 끌고 가실 건지, 내년에는 재조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PRIME사업의 경우에 과연 그 목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느냐 그리고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공학 분야 얘기했지만 좀 상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융합 부분을 좀 더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던 대학에 너무 큰 소용돌이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저희도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분을 우려했기 때문에 대학 내 협의, 합의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형태로 저희가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정부가 주도해서 장기인력 전망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도 단순히 그런 인력 전망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래산업이나 전체적인 구조나 최근의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참

조하도록 유도를 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영**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이고 대략 열번째 추경호 위원님까지 오전에 질의를 하고 점심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김석기 위원**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미래일자리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차관님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조정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원전이 24기가 있습니다. 제 지역 구인 경주에도 월성, 신월성 등 해서 6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지난 9·12 지진 당시에 원전 인근 주민들이 혹시 원전이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은 전력을 생산하는 국가기반시설로서 저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특히 이번에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지진 또 해일과 같은 재난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고 평소에도 엄격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국내에도 폐로가 결정된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해체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 해체 시장이 수백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산업인 만큼 향후 미래일자리산업으로서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전 해체 기술 문제와 관련해서 부처 간 이기주의로 말미암아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자부차관님, 그것 아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 본 것 같습니다.

○**김석기 위원** 원전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이나 연구센터 건립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다. 또 원전 해체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다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중요한 일자리인데 이런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산업부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무총리께 건의를 해서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지금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바로 컨트롤타워 하는 조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특히 고리원전 1호기가 지난해 폐로가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해체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체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고리 1호기가 내년 6월 가동을 멈추게 되는데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원전 해체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등 착실하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리 1호기 해체는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그런 개념을 즉시 해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련 기술하고 인력 확보를 중점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우리 기업들이 이런 과정에서 많이 참여해서 트랙 레코드 같은 것도 확보를 해서 다른 나라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김석기 위원** 원전을 해체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는 2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해체 기술에 96개의 주요 기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34개의 주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기술의 확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위원님 지적처럼 96개 기술이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64개 기술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32개가 확보가 안 됐는데 산업부하고 미래부가 협력을 해서 21년까지 미확보된 기술을 22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래부는 이 과정에서 기초연구 등 원천기술을 주로 하고 산업부는 상용화 기술을 서로 분담해서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국내 원전을 보면 폐로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뿐만 아니라 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2호기 또 월성원전 1호기 등이 순차적으로 폐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적으로는 국내에 위치한 24기 원전 모두가 폐로가 될 것임을 감안하고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원전 1기의 해체 비용이 6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24기의 해체 비용을 우리가 추산해 보면 약 14조 4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기업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고급 일자리 등 막대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위원장, 최운열 간사와 사회교대)

원전 해체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470여 기의 원전이 현재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블루오션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이만큼 큰데, 원전 해체 시장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산업이고 또 실적 중심의 시장 참여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세 나라뿐이고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리원전 해체 시에 우리 기업들이 해체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원전 해체 실적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불란서, 독일, 미국 등 일부 나라의 기업들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한 60개 기업들이 관련된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영세한 수준이라서 앞으로 실적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갈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석기 위원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중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인재 양성이 필요할 것이고 또 실제로 기업들이 해체 경험을 쌓아서 경쟁력을 갖추어야만이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

○김석기 위원 그래야만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운열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 위원 문미옥입니다.

저는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창조과학부가 우리나라 국가 R&D의 주무부처이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문미옥 위원 그런데 국가 R&D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 수가 6만 5000명에 달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알고 있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리고 그 인건비가 한 50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근로계약이 없이 그냥 장학금 형태로 지원을 받아서 특히 이공계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연구 안전사고라든지 그다음에 근로계약이 늦어짐에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사회가 보장하고 있는 안전보장망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국가 R&D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인건비를,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사회안전망 속에서 안전하게 국가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알고 있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요 요청드립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뿐만 아니라 신용현 의원님도 제출해 주셔서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법률 검토에 대한……

○문미옥 위원 제가 지난번에 미래부에서 받은 답변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에 고용노동부 앉아 계신데 아

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4페이지 기본방향의 네 번째에 보시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공정한 대가 및 사회안전망 보호를 받도록 지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가 R&D를 핵심 인력으로 키우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문미옥 위원 그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협동조합에 관한 인식이 굉장히 확대는 됐는데, 저는 특히 이번 미래일자리특위에서도 핵심 의제로 삼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참여를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반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일단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만……

○문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미래부에다가,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지원에 대한 법률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기재부에서도 좀 같이 미래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저희도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이 설립 형태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나 규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내용들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도 특별히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문미옥 위원 지원 내용은 별개로 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전문성을 사회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도 안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리고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체제 자체가 지속적인 구성원의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여다보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산업구조조정 여파로 인력들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중에서 특히 조선산업이 먼저 산업구조조정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좀 들여다보니까 정부의 고용대책이 대부분 재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문미옥 위원 그런데 수년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대학을 진학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해 오고 있는 학생 전공자들의 신규 일자리는 사실은 굉장히 절벽 수준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문미옥 위원 그런데 정부가 산업구조조정의 대책을 마련하실 때 보니까 대졸을 앞두고 있는 또는 그 전공을 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조선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래서 보면 조선업만 해도 해마다 2500명가량의 전공자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보면 청년 취업자 문제인데, 정부가 산업구조조정에 별도의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산업이 회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실 텐데 이렇게 신규 취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다음에 회복했을 때 활용할 인력이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는 선순환 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시는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그래서 저희 기존에 있던 청년대책 중에 여러 가지 훈련사업도 있고요, 또 취업……

○문미옥 위원 그런데 청년대책 중에 하기보다

는, 제가 그래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산업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할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조금 책임지고 청년 취업에 대한 신규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해서 구조조정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법률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아무튼 저희 기준에 있는 훈련체계나 아니면 상담 알선 이런 체계를 통해서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문미옥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담만 갖고는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고 채무자·채권자들이, 구조조정계획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미래부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아직까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굉장히 느린 상황입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지원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특히 4차 산업혁명 상황에서 앞으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할 텐데 육성 지원에 관한 예산 배정 이런 것들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시고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잘 알겠습니다.

○**문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운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들을 많이 비우셔서 계신 분들 위주로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 경기 파주출 출신 박정 위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경모 조정관님, 현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경제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2016년 1월 신년에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 청년일자리 창출 본격화를 7대 성과 중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년 실업자가 56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인데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하면 청년 10명 중 6명, 7명이 지금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까 미스매치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6~7명 정도가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 부문도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도소매업이 21.6%, 부동산임대업이 10.2% 등 창조경제형 창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업종이 40.7%에 달합니다.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은 실제 1% 내외의 기업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가 아주 안 좋지요?

조정관님, 그러면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업에 대한 창출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3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 지원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원을 통해서 사실 창업 쪽과의 연결을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국감에서 미래부가 제게 제출한 창조경제 주요 실현계획 예산 내용을 보니까 산업부 소관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산업기술국제협력, 수출 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 부품기술개발,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 핵심기술개발, 소재부품기술개발 그리고 제조기반 산업핵심기술개발 등 5개 사업인데 이게 전부다 문제는 주요 사업들이 박근혜정부 출범 이전에 시작된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또 다른 통계치를 봤더니 2015년 기준 산자부의 창조경제사업이라고 해서 미래부가 제출한 사업은 총 83개 1조 3140억 원인데 예산 기준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시작한 사업은 1400억밖에 안 돼서 1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도로 다시 봤더니 1962

년부터 해 오던 사업도 창조경제사업이라고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존 사업을 재탕 삼탕 하는 게 무슨 창조경제인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창조경제의 핵심 축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그 중의 한 플랫폼입니다.

○박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혁신센터가 조성한 펀드를 봤더니 부산센터의 경우에는 목표액이 1000억 원인데 보증펀드는 지금 조성이 하나도 안 됐지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 위원 대전·세종·서울 센터 이런 데는 실집행률이 0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미비해요.

또 하나 문제점은, 아까 고용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업을 많이 만들어 냈다고 그러는데 혁신센터 직원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이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관치체제와 비슷하다는 비판도 스스로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양적 성과는 좀 있었겠지만 질적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PPT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을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데가 창업보육센터인데 2015년 예산 기준으로 투입액은 비슷합니다. 차라리 130% 정도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투입이 좀 많았고요. 보육업체 수는 1100개 정도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는 6000개가 넘고요, 매출액 수준으로 보면 아까 16년도 발표로는 조금 더, 3500억 원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역시 이것은 창업보육센터도 늘었을 테니까 15년 기준으로만 보면 1647억 원이고 창업보육센터는 1조 7000억입니다, 9.5%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고용 인원도 이렇게 1400명대하고 1만 8000명대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보육센터만 못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창업보육센터는 이미 역사가

오래된 데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15일 첫 번째 센터 출범을 통해서 작년 7월 22일 까지 구축이 됐습니다. 좀 오래된 데는 2년 남짓 그리고 조금 늦게 출범한 데는 1년 좀 넘었는데요, 단순 비교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운열 간사, 정동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 위원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정부의 제일 혁신과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렇게 진행된다면 대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앞으로 정부가 바뀌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것들이 실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나를 생각해 봤더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질 당시의 언론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PPT 좀 띄워 주시지요.

미르나 K스포츠재단이 지금 온통 난리인데 이것에 못지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A그룹 임원이, 매경이코노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기업을 희생시킨 꼴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준비하는 대기업분을 만났더니 ‘사공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관치경제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 누가 등을 떠밀었고 사공들은 누구였는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5년—작년이지요—7월 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17개 지원기업 대표 및 정부부처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여셨어요. 그리고 오찬을 하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박정 위원 그래서 이때 창조경제를 위해서 정부와 대기업과 17개 시도를 짝지어서 대기업에게 수백억 원의 돈을 기금이나 펀드 형태로 출연하도록 하는 방식을 두고 ‘사실상 강제 할당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일 오전에 참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총수들에게 미르나 K스포츠재단 설립 구상을 설명하고 안중범 수석이 전화를 걸어 기금 출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청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실제적으로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17개 기업 중에서 1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했어요, 껍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역점사업으로 두었기 때문에 서울하고 세종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15군데의 출범식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 보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하면 창조적이지도 않고 혁신적이지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의 강제 출연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출연이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순실 국기문란이 사실로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에게 계속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조경관님께서서는 아마도 대통령하고 재벌 회장이 만나서 무슨 얘기 했는지 잘 모르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저는 잘……

○박정 위원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시니까 7월 24일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대기업들과 오고 갔던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당시 회의 기록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각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똑같은 경우 청와대, 다른 부처, 대기업들 간에 오고간 공문 사본, 회의 기록도 같이 제출하셔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있다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영**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 오늘 9개 부처의 아홉 분이 업무 보고를 하시는 동안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한 대기업 주도 성장의 한계가 지금 왔고 또 전세계적으로 저성장과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가 미래의 일자리특위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갈 때 돌이 없어

서 간 것도 아니고 또 19세기 초 노동력의 현황을 봤더니 90%가 농업이었는데 지금 한 2% 정도만 농업에 종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굉장한 순환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창업, 젊은이들이 대기업도 못 가고 공무원도 안 되면 다른 나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창업, 지식 정보화를 위한 그런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평선(function)이겠다, 그러려면 인프라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벤처들은 저희가 일본이나 미국을 연구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벤처 해서 성공해 본 사람이 자기가 성과를 얻어서 그것을 또 재투자를 합니다.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벤처 창업을 한, 들어가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벤처 창업으로 자꾸 가려면 거기가 자본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자본이 좋고 건실한 민간 투자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기술과 서비스를 맡게 되면 엑시트(exit)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M&A나 지분을 팔고 나올 수 있어야 그 자금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든가 또 두 번째는 자기 스톡(stock)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사를 하고. 그래서 인터널리(internally) 재투자할 수 있고 또 계속 확장해서 매출로 프라핏(profit)을 가지고 자기가 성과를 창출하는 건데, 제가 벤처 창업에 대해서 조세특례법에 대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최상목 차관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벤처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황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현행 자체는 행사 금액이 연간 1억 원이고……

○송희경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런데 그게 저도 현장에 있는 많은 젊은 벤처 창업자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벤처 창업을 하고서도 1000억 클럽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지요.

그런데 벤처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데스크리를 또 넘어가려면 거의 죽을 맛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1억이라는 게 지금은 그렇게 큰 금액일지 모르지만 이게 창업이 활성화되면 자금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다, 또 그것 때문에 우수 인

력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서 이것을 좀 상향을 시키자, 그래서 1년에 막 10억씩 상향시키면 갭이 너무 커지니까 3년을 정하고 그 안에 5억을 상향시키자라는 법을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상향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벤처 업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현행 1억 원 자체도 사실은 외국에 비해서는 비슷한 규모입니다마는 저희가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들어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3년간 저희가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또 더불어서 상향 금액이 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스톡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낼 것이냐, 아니면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냐? 그런데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를 보면 맥시멈 이게 한 40% 되니까 양도소득세 쪽으로 몰아서 적게 택스(tax)를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런데 미국에 보니까 VC(Venture Capital) 택스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자본에 대한 소득세를 특별히 댈어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중간되는 23.8%를 맥시멈으로 하는 굉장히 특별한 세법을 두고, 벤처캐피탈의 자본이 굉장히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차관님,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 세법에 대해서는 불수용한다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택스를 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젊고 유능하고 혁신적인 그런 융합 인력들이 많은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차관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저희가 3년간 5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리고 최소 1

년 보유 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원래는 이게 근로소득세의 대상이었는데……

○송희경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세율이 낮고……

○송희경 위원 예,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다음에 캐피탈게인(capital gain)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특례를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선택 허용하도록 했고.

○송희경 위원 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 허용한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송희경 위원 확대하셨는데 다른 특별한 특별법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한 다른 제3의 제도를 만드는 부분은 사실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예.

고경모 실장님께 더불어 여쭙겠습니다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컨트롤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엑시트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이 들어가려면 거기서 보육·육성하는 육성 기금보다는 민간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가도록 유도해서 실리콘밸리처럼 굉장히 민감하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창업기업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운용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규직 인력 운용기금으로 올해 내년 예산이 조금 증액됐던데 근본적으로 지금 기재부의 차관님과 의논해서 가지고 보육기업들이 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택스 부분도 가미해서 해 준다면 지속적으로 같이 창업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더불어서 이렇게 창업이 된다고 하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됩니다. 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 전부 다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하고 있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지금 저희가 있는데 전통산업이 새로 재편되고 새로운 가치가 업(up)되려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이영 차관님과 미래부에서 오

신 고경모 실장님께 같이 여쭙겠습니다.

이영 차관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 중에 보면 2018년부터 초등학교부터 필수교육 고시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불어 업그레이드 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이수과정 시간이 조정돼야 됩니다, 차관님. 지금은 중국이나 이런 데는 주당 2시간, 일본만 해도 굉장히 많고요. 독일, 이스라엘,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수시간은 주당 0.2시간도 안 되고 있지요, 현재 우리가 정해진 것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우겠지요.

1분만 더……

○위원장 정동영 예.

○송희경 위원 그다음에 커리큘럼이 교육부가 주관하기보다는 미래부와 교육위원회나 협력을 해서 이런 것 특별히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과목에 대한 커리큘럼이 좀 더 재밌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테이셔널 씹킹(Computational Thinking) 위주의, 코딩 위주가 아니고요 그런 초등 과목이 돼야 될 것 같고.

사교육의 과열 문제는 지금 엄청납니다. 이것 주저앉히지 않으면 또다시 초등학교의, 중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말장난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 양성 문제인데요. 지금 이공계 열을 졸업한 경력단절여성 수가 35만 명입니다. 그래서 미래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소프트웨어 여성 수급 활성화제 그 예산을 조금 더해서, 교육부와 같이 교사 양성 제도를 가지고 양성을 엄청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경력단절여성들도 포함해서, 현재의 교사 양성도 필요하지만 사회에서 도와주는 보조교사 양성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님?

○교육부차관 이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수시간은 지금 초등이 17시간, 중학교가 34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가서 보면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68시간 아니면 102시간까지 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

험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활동이나 아니면 방과후 학교에서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단순한 코딩이 아니라 실제로 컴퓨터 논리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학교 현장을 확인해 보면 많이 스크래치(Scratch) 같은 것 쓰고 실제로 움직이는 조그만 로봇 같은 것 해 가지고 실제 논리력, 뭐 이렇게 반복하는 루프를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사교육을 여러 가지 관리 감독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감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과목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른 형태, 그리고 당연히 방과후학교나 학교의 프로그램 자체가 그 논리 사고력을 위한 거다, 단순히 프로그램 외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형태로 하면서 억제하는 방향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양성은 미래부 쪽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연수계획도 초등은 6만 명 그다음에 중학교는 기존에 정보 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다시 연수하는 부분을 적극,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영 아까 송 위원님이 미래창조과학부에도 답변을 요구했는데……

○송희경 위원 예, 경력단절여성들.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이미 미방위 위원이시기 때문에요 잘 알고 있고, 이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나 커리큘럼 개발과 관련해서 미래부와 교육부 간에 아주 긴밀한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공계 졸업하신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예산이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영 다음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까지를 포함하니깐 시간 좀 넉넉히 주십시오.

○위원장 정동영 예.

**○이완영 위원** 먼저 우리 부처 차관님들, 오늘 잘 들었고요.

우리가 ‘미래일자리특위’ 명칭입니다마는 우리가 수행하는 과제는 현재의 일자리 창출, 실업 해소 이것도 지금 현재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일자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런 걸로 오늘 부처에서도 꼭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논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 이것 받으셨지요?

우리 토론회에서 나온 것을 부처에 쥐서 검토 의견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보고하는 것하고 여기에 제출된 것하고는 사뭇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 터치 본인확인 같은 경우 이것 낼 때는 불수용이었어요. 오늘도 들어 보면 수용에 가깝게 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부처에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불수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한 것만 갖고 일자리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불수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처에서 재검토를 해 주세요. 해 주셔 가지고 다시 우리 간사들이 함께 부르든지 우리 전체회의에서 부르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다듬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수용이라고 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이 있고 예산이 있고 제도가 있어요. 차관님들 바쁘셔서 깊이 있게 잘 안 보셨으리라 보는데 법률을 수용하면 앞으로 추진계획, 언제쯤 국회에 내서 어떻게 하겠다, 정부안으로 하겠다 국회 발의로 하겠다. 예산이면 수용해 났으면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못 됐으면 그 이후로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든지. 끝으로 제도에 관한 사항 같으면 제도개선 세부 일정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작성해서 우리 행정실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재부 차관님께,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공약이 70만 개였습니까? 5년 내 임기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게 고용률 70%……

**○이완영 위원** 고용률 70%이고.

일자리 숫자가 몇 개…… 안 나왔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자리 숫자는 제

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출범 당시에 각 부처별로 일자리 창출 목표가 있었고,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일자리에 농림·수산·축산 일자리가 늘 없어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여러 가지 구조의 변화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쪽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농촌에 가도, 축산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그 희망만 주면 청장년들이 왜 안 들어가겠어요, 실업 상태에 있는데. 그쪽을 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 그러니까 농촌하고 농업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해서 농촌의 일자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농업과 관련, 농업이……

**○이완영 위원** 축산·수산업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수산업이 모두 6차 산업으로 이제 1차 산업이 아니고 2·3차 산업…… 그것 관련된 연관 산업들의 고용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 같이……

**○이완영 위원** 그쪽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 수 있다 저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 부분에 대해 노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내가 농림위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얼마나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요즘 또 스마트 농업 그러잖아요, 스마트 농업.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4차 산업 대응을 해야 된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가? 제가 보기에는 범정부 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민간인도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 아직 그런 것 생각 못 하고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까 미래부에서 그 계획을 작성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범부처를 아우르는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민간도 있고……

○**이완영 위원** 4차 산업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4차 산업에 특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큰 테마로 4차 산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시작했고요, 민간 위원들하고 지금 토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완영 위원**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시작한 지 한 달,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도 한번……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직은 저희가 논의 단계입니다만 그것은 제가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어젠다를 뭘로 잡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저희들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견도 들었으니까 같이 한번……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공식적으로 뭔가 미리 이런 큰 정부 기구를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스터디를 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액션플랜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아까 말한 대로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전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제가 보면 맨날 4차 산업 4차 산업…… 뭘 준비하는지,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이라는 기구가 있고요. 그 안에 각 부처에서 일단 파견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은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일단 발표할 예정이고.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기본 내용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지금 부상하고 있는 AI라든지 IoT·빅데이터 관련된 분야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의 필요성, 법률의 정비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좋네요. 거기에서 추진할 과제가 나온 게 있으면 차제에 우리 특위에 주시면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잖아요? 국회의 힘을 함께 합쳐서 그것을 나중에……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맞습니다. 그 계획이 발표되게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다듬어져야 될……

○**이완영 위원** 언제……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법률, 예산 뭘 중장기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규제 개혁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래 당초에는 10월 중으로 예상했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아마 11월 중이면 저희가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11월 중에 되시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자료를 주면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4차 산업 관련해서 어떻게 가르칠 건가요?

새로운 영역인데 가르칠 사람은 있으며 그것을 또 어떻게, 지금 기존의 학교 운영·교실 감안할 때 어떻게 가능하냐…… 걱정이 많네요.

○**교육부차관 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가 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학급당 학생 수가 한 스물두세 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운영 자체가 교실에서 조금 가능한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학기제를 2013년부터……

○**이완영 위원** 제 말씀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서 4차 산업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것을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누가 가르치냐고요?

가르칠 사람인 선생님부터 제대로 육성돼야 가르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들 기존의 정보교사가 있었고요, 연수 새로 하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형태의 어떤 로봇 같은 것하고 프로그래밍하고 결합을 해서 간단하지만 학생들이 뭐 만들고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실제로 ICT와 움직이는 것들을 결합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저는 그게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부터 제대로 길러내야 개네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 4차 산업에서 적응해 나갈 텐데……

산자부도 아까 보고에 산업 구조조정, 개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말로만 한다고 그러는데 세부계획이 진행되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원동진** 예, 철강하고 석유화학은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차 산업에 대응하는 구조조정 얘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원동진** 4차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주력산업 고도화하고 신산업 창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KDI·KIET랑 종합적으로 큰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언제쯤 나오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원동진** 저희가 목표는 12월 말로 해서……

**○이완영 위원** 초안이라도 나오면 제출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원동진** 예.

10년 장기계획 플랜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초안이라도 가능하면 빨리 주십시오.

방통위, MB정부 때 종편 만들면 일자리 많이 창출한다 그랬는데 몇 자리 창출한다고 그랬지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때 엄청 떠들었어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얼마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예.

**○이완영 위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까 기재부에서 우리 특위 목표가 달성되려면

노동개혁법·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개혁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는 것도, 일자리미래든 지금이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도…… 제 견해는 우리 일자리특위에서 그것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경남 양산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 중의 하나가 고용률 70%였고, 그때 신규 창출 고용 목표가 238만 개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 17억 5000까지 합치면 전체 5년 동안 일자리 예산에만 70조를 투입합니다, 이 정부 5년 동안.

2012년 이 정부 직전의 해 일자리 예산이 9조 6000이었기 때문에, 그 70조를 5년으로 나누면 지금 이 정부에서 매년 14조씩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9조 6000 대비하면 한 4조 4000억 정도를 추가로 일자리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4조 4000억을 매년 넣었기 때문에 5년 하면 22조 정도가 추가로 투입된 일자리 예산인데요. 그 결과 고용률 70%는 어제든 기재부장관이 달성 불가능하다고 확인하셨고요. 사실 그 목표가 금년도에 68.4%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65.9%입니다. 실업률은 원래 2012년 3.2%에서 지금 거꾸로 3.6%로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예산을 전체 연간 14조씩 넣고도 이렇게 안 내렸고, 지금 현재 보면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나쁜 일자리만 거꾸로 양산하게 되는데요.

기재부 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라면 결국은 공공부문이나 아니면 대기업 쪽에서 일자리를 좀 내놔야 되는데 지금 공공부문이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7.6%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이 21%거든요.

이것을 지금 현재 경찰이라든지 군 부사관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추가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매출 신장률이나 자산 증가율에 비해서 고용 증

가율이 훨씬 낮습니다. 대기업이 고용 자체를 지금 기피하고 있는데 고용이나 인건비에 연동해서 조세제도를 좀 바꿔서 고용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해서 대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 답변을 나중에 따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용부 쪽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률 70% 목표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그 당시 2100시간을 2017년까지 19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근로시간이 거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2150시간이거든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목표가 그 당시 시간제 일자리, 지금 말하는 나쁜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고 정규직하고 동일한 시급이나 모든 복지는 동시에 받으면서 다만 근무시간만 정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93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제 일자리 자체가 전혀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보통 나쁜 일자리이기 때문에 과연 시간단축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만드는 부분에 대한 걸 지금 복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문제 하나하고……

제가 시간이 없는데, 질문드리고 답변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쪽은 제가 평생교육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에 보니까 평생교육 예산이 386억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전체 우리 교육부 예산의 0.07%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평생교육비가 8.2%거든요. 독일 18%고, 스웨덴은 심지어 38%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4차 산업혁명 적응의 가장 관건은 교육 혁신에 있다, 교육 혁신의 중심은 학교를 탈피한 학령기의 학생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교육부가 학교에만 매달리잖아요. 평생교육 하라니까 결국은 대학에다가 학과 신설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그런데 과연 교육부에서 이런 평생교육에 대해서 어떤 의지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학교가 아닌 일반 사회영역에서 평생교육 하는, 특히 지금 광역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하고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전체의 법체계 또는 어떤 조직체계,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교육부 내에 별도의 조직 자체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까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재부부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는 국민안전이나 교육·복지 분야,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서 지금 이미 정해진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증원하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공분야 고용비율이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재정여건하고 공공부문 효율화 등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요 좀 더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부분은 결국은 경제여건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활력이나 경제활성화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기업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지금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라든지 이런 투자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중치를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공부문의 고용 규모 자체가 너무 소극적이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에 대해서도 그것을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실 일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제 일자리, 특히 저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120% 이상이라든지 4대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왔고요. 그중에서 특히 새로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 시간선택제로 고용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풀타임으로 일하던 분들에 대해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해 가는, 소위 전환형 시간선택제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은 좀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계속 재정지원을 확대하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2012년에 비해서는 2015년 현재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런데 시간선택제도 그렇고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했는데 노동개혁 법안이 지체가 되면서 그 부분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교육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게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 되는, 인생 이모작, 삼모작 시대에 대응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분류상 아마 이게 조금 작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립 국으로 평생직업교육국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 더 강화하고 조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부처와 협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고용부하고 협업을 많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고교에 가 있는 학생 중에 갑자기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직업훈련 시키는 것을 고용부하고 같이하면서 위탁교육을 전문대에서 하는 사업을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런 형태나 아니면 이후에 첫 번째 직장을 퇴직한 분들이 전문대에 와서 직업훈련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부처 협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자체와의 협업 부분들도 신경 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영** 서형수 위원님께서 ‘평생교육 예산이 우리는 0.2%, 일본은 8%, 독일은 18%,

스웨덴은 38%’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차관께서 ‘예산분류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차관이 분류하면 몇 %예요, 평생교육 예산이?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학금 같은 것을 주는데 조금 나이 많은 분한테 드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아마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직업훈련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교육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그쪽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꽤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영** 어쨌든 예산 배분하는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같은데 우리 차관께서 고용노동부라든지 다른 부처의 평생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다시 재분류해서 서형수 위원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다음 이종배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이종배 위원**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미래부 실장님, 창조경제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선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창조경제를 ‘창조’자 붙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끌고 가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일단 주무부처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주무 부처입니까? 창조경제는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데,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이종배 위원** 미래부에서만 운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 이것에 대해서도 물론 초기 단계지만 아직은 성과가 좀 미흡하다, 그렇지요?

또 앞서 박정 위원님이 지적한 바과 같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와 비교할 때도 좀 미흡한 실적이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미래부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하고 기재부나 총리실에서 같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목표도 분명하고 이것에 대한 평가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만……

현 정부 끝나면 창조경제혁신센터 문 닫을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계속 갈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지속 가능하도록 체계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들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중복 지원 문제, 다른 중소기업청이나 산자부 산하 테크노파크에 중복 지원하는 문제도 언론에서 지적받은 바도 있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관계부처 간에 협업을 통해서 일단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청·산업부 이런 쪽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일단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지적하고, 그래서 미래부에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 모두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거든요.

민간의 역할도 강화해야지요. 이게 좀 잘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자꾸 정부의 역할을 좀 더 늘리게 되거든요? 15년도에 비해서 지금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15년도에 28.9%에서 16년도에는 43.6%로 정부 지원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민간 역할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런 부분도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같은 것도 사업화가 아주 미흡해요, 그렇지요? 이런 분야도 좀 더 노력하고.

어쨌든 이 창조경제가 현 정부에서만 끝난다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안 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교육부차관님,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어요.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것도 걱정이 많으세요. 과연 초등학교 교사의 30%인 6만 명 연수를 시켜서 그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졸업하면 65%가 직업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이종배 위원 지금 선생님들이 그전에 교육받은 것 가지고 이제 앞으로 교육을 못 시키는 것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다른 데 가서 취업하고 이렇게 하시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이종배 위원 우수 교사를 확보하려면 그런 제도만 갖고는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노동시장 유연성같이 교사들 유연성 또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강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지도능력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동의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초등학교가 2019년 5학년·6학년 실과에 들어갑니다. 17시간이고요. 실제 저희가 교과내용 자체는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무슨 프로그래밍, 뭐 해 가지고 'If Not'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블록 가지고 하고요. 맨 처음에 하는 것 보면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논리력을 가지고 게임 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컴퓨터에서 블록으로 되어 있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잘하시는 부분 얘기하시는 건데 나는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거니까, 과거에는 교사들이 주입식 교육 받으신 분들이 가

르치고 그러시잖아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이종배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교사 능력을 키워야지 된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교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고.

그래서 그분들도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가르칠 수 있는 것들도 개방해 봐야 된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또 지금 현재 컴퓨터라든지 컴퓨터실 PC 이런 것들은 주로 지방교육청에서 개선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지방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교육청별로 그 준비과정이 차이가 많이 큼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지금 안 돼 있는 곳은 독려하고 있는 있습니다. 인천하고 광주가 조금 미진한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채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것도 하고 잘못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사교육시장에 밀릴 수가 있어요,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 부분이. 지금도 벌써 강남에 가보니까 코딩학원, 코딩 과외, 코딩 캠프니 코딩 유치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미국의 대학까지 방문하는 견학 프로그램까지 넣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사교육에서는 전문가가 좋은 장비 가지고 가르치니까 공교육이 밀릴 수가 있다, 준비를 잘 못 하면 밀린다 이런 겁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중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건데 그 준비 과정이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 벌어지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미래부하고 협업 과제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선도학교를 올해 900개를 먼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먼저 잘 작동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규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공교육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유념해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영** 이종배 위원님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정부 끝나고 사라지지 않도록 미래전략 차원에서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 얼마나 좋은 개념이었습니까? 그런데 요새 녹색이라는 개념 잘 보이지 않는데요, 같이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미래일자리특위에서 관교벨리 방문했었어요. 고경모 조정관이 안내도 해 주셨는데 그때 위원들께서 여러 사례 중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공사현장의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위치 표시, 실시간으로 위치 모니터링 하는, 위험 공사장의 노동자들이 실시간으로 컨트롤타워하고 늘 교신이 되는, 통신이 되는 벤처 기술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도 나와 계신데, 오늘 하루도 5명이 산재로 숨지잖아요? 세계 1등이예요. OECD 산재사망률 1등을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그런 벤처 현장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서 그런 청년 창업가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 연계해서……

고용노동부도 답답하잖아요. 작년에도 1년에 19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런 후진국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 일자리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현재 일자리에서 매일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것?

목숨은 지구의 무게보다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 대구 달성군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입니다.

좀 큰 이야기 여쭙보겠습니다.

우선 부처 내에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대책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일자리에서 미래 일자리까지 다 포괄해서 하는데 주관부처가 어디입니까? 기재부입니까, 고용부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자리 대책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일자리 대책의 전반적인 주관부처는 기획재정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시장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실업과 관련된 고용부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주관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각 부처가 협업을 하는 곳이고 조금 웨이트가 많은 곳이 고용노동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 우리 고용률 70%,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흔히 말해서 유일하게 숫자적·계량적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용률 70%, 굉장히 의욕적이죠. 많은 실무자들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큰 의욕을 갖고 한다 그렇게 시작은 했던 거고 3년 뒤, 4년 뒤에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는 데까지 70%를 향해서 열심히 하자 이런 목표를 갖고 추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용률 70% 세울 때 대개 주요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러이런 것들을 노력하면 그래도 70%에 근접해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지 고용노동부하고 기획재정부 차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당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서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 선택제를 통해서 일자리 나누는 쪽도 있었고요, 그 외에 투자 활성화, 규제개혁을 해서 각 분야별로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리고 추가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요 측면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의 노력과 공급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나름대로는 분야별로 해 가지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런 대책들은 당초에 계획했던, 구상했던 것의 어느 정도, 몇 % 정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기획재정부차관 주제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점도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입법 지연 등으로 인해서 아직 효과는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부 대책이 수없이 많게 과제별로는 있을 텐데 굵직굵직한 것들이 꽤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뭔가 마련

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결국은 70%든 68%든 이렇게 가는 데 결정적으로 미진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대개 어떤 것을 적시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70년대 이후에 계속 성장도 둔화되고 실업도 많아지면서 몇십년 동안 고민을 많이 해 왔는데 결국은 90년대 들어와서,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고, 특히 2007년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어제 그제 중앙일보에도 스페인의 사례가 설명되어 있는데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지 않고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에서 당초 70% 대책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몇 개월 후에 노동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노력 그리고 2대 지침으로 지칭되는 행정적인 노력도 기울였지만 그 점이 상당히 미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최소한 이번 정부에서 노동개혁 그리고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생각을 가다듬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혹시 기재부차관 보탬 말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당초에 했던 것은 고영선 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부분들 그리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미진했던 것 같고요,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수요 확대하는 대책들을 노력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외여건이 나빠졌고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규제개혁이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노력이 좀 더 촉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노동시장 그 자체 요인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수요 관련 경제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결국은 70%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을 텐데 아마 그게 이

유가 어디 있었던 간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당초 구상한 대로 잘 안 갔을 겁니다.

그러면 안 간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떠한 핵심 대책들이, 기본이 깔려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용률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70% 수준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그런 정책적 어젠다를 각계에 강하게 협조 요청을 하고 거기에 또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역할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어느 한 곳의 일방적인 의욕이나 추진 가지고는 굉장히 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핵심 어젠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당초에 계획했던 어떤 것들이 어느 곳에서 막혀서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리스트업을 해서 협조 구하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 아마 행정부에서는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게,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국회에서 여러 중요 핵심 법들이 막혀서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정치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규제개혁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떤 그림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형태로, 어떤 스피드로, 곳곳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사실 굉장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맞는 인력수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역할은 역시 대학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얘기가 ‘가장 규제가 많은 곳이 또 대학 아니냐?’ 그래서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파를 해야……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는 길은 시장이 유연하게, 시장이 미래를 보고 끊임없이 탐색해 가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각 부문의 규제 혁파,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특히 대학교육에 관해서 여러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대학규제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관해서 근본 물음을 갖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기재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부에서 이것은 잘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똑같은 화두인데 4차 산업혁명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꼭 굳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안 붙여도 좋습니다. 경제 환경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여기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하면서 빨리 시스템을 갖춰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한다고 정부가 예단한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났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곳곳에 걸림돌이 있다 이 이야기가 경제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소리다……

그러면 이 규제 혁파의 문제도 이러한 4차 산업 등과 관련해서 그림이 어떻게 다가올지, 이러한 변신을 하는 데 다가올 수 있는 제약요인이 뭘지에 관해서 기재부나 전문가들이 함께 프레임을 짜고 이것 제도 하나하나를, 규제 하나를 드러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산업부 같은 데서는 산업계 현장에서 그런 수요가 무엇보다 많을 거니까—미래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근본적인 접근을 해 줘야 된다, 지금 있는 법제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개별적으로 수요가 있는 이 한두 가지, 여기에 수없이 많은 개선과제가 있듯이 이런 것 가지고 접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해 줘라, 특히 산업부하고 미래부는 그런 수요를 늘 접촉하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고 기재부는 그런 틀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지에 관해서 부처 간에 협업을 유도해 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도 한참 늦은 변화의 추격 이 과정 속에서, 지금 패스트 무버(fast mover)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이 하고 있는 수준의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조차도 못 한다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환경, 프레임을 새로 잡아주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강력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영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에 수고해 주신 9개 부처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결위원회 또 각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석을 하신 분이 많습지만 오후에는 참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한 뒤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영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위원님 순서입니다.

○최운열 위원 이 일자리특위가 생기게 된 배경은 다 아시겠지만 청년실업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특위가 구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 각 부처의 보고를 들어보면 너무나 한가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인상이 듭니다. 기존의 일자리도 없어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미래가 닥쳐 올 텐데 미세조정으로 과연 청년일자리가 생길 건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가한 발표를 했다고 느끼는 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두 차례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정부에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수용 불가' 그런 답을 보면서 과연 이래 가지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두 부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공정거래위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일자리는 수십만 개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납품가 그냥 강제로 낮춘다든지, 이게 근본적인 일자리를 줄이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신 분, 처장이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예.

○최운열 위원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도 한번 질의드렸는데, 지금 일감 몰아주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규모는, 내부거래 규모지요.

○최운열 위원 산정해 보셨어요? 대개……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저희가 발표도 했습니다.

○최운열 위원 얼마나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숫자는 정확

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한 20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 200조 예를 들어서 그중의 한 반 정도, 반은 뭐 수직계열화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100조 정도를 일감 몰아주기 해제한다 그러면 1년에 매출액 20억짜리 회사가 몇 개 생깁니까? 5만 개 생깁니다. 그러면 젊은 회사 사장 5만 명 생기고 한 회사가 20명씩만 채용을 해도 10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납품가 문제, 지난번에 법은 통과됐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되는 건 사실 아직도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하는 게 한 88%인데 청년들이 지금 중소기업을 안 가는 이유가 워낙 임금 수준이 낮아서 그러잖아요. 임금 수준이 왜 낮겠습니까? 중소기업에 적절한 이윤이 보장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의한 법이 전속고발권 폐지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결이 되면…… 그런데 여기는 수용 불가라고 그랬는데 대통령 뜻도 거절하셨네요? 엇그저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자료 한번 보세요, 전속고발권 폐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대통령한테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그건 제가 알기로는 성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최운열 위원 무슨 성과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그간의 경제민주화 추진 성과고……

○최운열 위원 성과인데 전속고발권 폐지라고 썼다고요, 성과가.

그러면 대통령이 알고 계시는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얘기하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사실상 폐지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속고발제라는 것은……

○최운열 위원 지난번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목에 피를 토하면서 건의하더라고요, 전속고발권 폐지해 달라고. 그런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해요? 납소를 걱정하세요? 이제 그런 걱정 더세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고용노동부, 여기도 여러 가지 보고 좋은 것 하셨는데요. 여기도 제가 보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답은 나중에 하시고.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의 때도 제안하였던 동일노동 공정임금체계 아시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문기섭**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런 정도로의 임금구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정규직이 100이라고 그러면 비정규직이 한 60 정도 받는데 이것을 동일노동……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얘기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고요. 그건 지금으로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정규직이 100이면 비정규교육직의 임금을 한 120 정도로 책정하는, 그 당시 이원덕 전임 노동연구원장이 여기 오셔서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어떤 고용구조의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 기존의 산업에서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나중에 답을 해 주시고요.

교육부에 아까 박경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제안하셨지만 차관님은 대학에 계셨잖아요. 대학에 계시다가 교육부 가 보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잘 돌아가요?

여기 LINC사업, 이제 BK는 없어진 것 같고, PRIME·ACE, 예산 몇백억 가지고 모든 대학을 교육부가 손에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한번 평가해 보시면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PRIME사업 가지고 모든 대학 얼마나 괴롭히고 계세요. 그게 대학에 자율이 생기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 다 예산 줄이고 폐지하세요. 그 대신에 대학의 등록금을 자율화하면 각 대학이 알아서 시대에 맞게 필요한 과가 무슨 과, 대학이 스스로 다 할 겁니다. 교육부가 돈 몇 푼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시고.

대학에 계셨던 교수 입장에서 교육부를 한번 개혁해 보시고 진짜로 이 시점에서 대학교육에 교육부가 필요한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학 구조조정 하시지요?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정말로 경쟁력 없는 대학을 퇴출시키고 경쟁력이 있는 대학에 몰아줘야 구조개혁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국의 모든 대학에 뭐 하나 사업 가지고 이 사업을 충족하면 정원 안 줄이고 이 사업을 안 하면 정원 다 줄이고, 서울 대학도 정원 얼마 줄이고, 저 지방의 내일모레 문 닫아야 할 대학도 얼마 줄이고, 이래 가지고 구조조정이 되겠어요?

제가 한 세 부처에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 가지고 미래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절대 생길 수가 없을 겁니다. 세 부처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해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전속고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고 말씀드린 그 내용은 원래 당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고발할지 여부를 독점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권한이 전속고발제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공정거래법 등이 개정되어서 검찰총장, 중기청장, 조달청장 또 감사원장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하면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운열 위원**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 걱정. 공정위가 걱정 안 하셔도……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전속고발제의 필요성과 합헌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한 논거는 공정거래법 위반하고 관련된 활동은 기업의 영업활동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무분별하게 형벌을 적용하게 되면 기업 활동이 굉장히 불안하게 된다,

그래서 전문적인 판단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거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행정 제재, 즉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같은 행정적인 조치만으로 그칠지 아니면 나아가서 형벌에까지 이르게 할지를 판단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합헌이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는 2013년에 총수익가 사익편취 규정이 도입된 이후에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작년 6월부터입니다. 저희가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해서 조치한 데도 있고요. 현대나 CJ그룹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집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공정임금 그리고 동일가치·동일노동에 관해서 말씀 주신 그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체계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저희 임금체계가 잘 아시듯이 연공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노동개혁 과정에서도 입법추진 외에 임금체계를 보다 선진화하는 개편작업을 위한 컨설팅, 노사 간에 협의가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정 부분은 조금 더 학계와 같이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이라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공정질서가 우선적으로 원·하청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 내용에도, 노사정 합의 내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관련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교육부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자율성이 지금보다는 많이 높아져야 된다는 데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학 재정지원 사업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학의 자율성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고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중순에 저희가 향후의 대학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서 외부에 초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실제로는 너무 복잡하게 여러 개 있는 재정지원 사업들을 조금은 통합하고요. 그다음에 대학들의 자율성을 좀더 신장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ACE 사업 부분들을 대학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운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자율화는 아마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대학등록금 수준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경쟁력 없는 대학들은 문을 닫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저희는 지역발전하고도 그 2개가 상생하도록 그러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틀 전체가 대학 전체의 생태계 그리고 또 대학의 경쟁력 자체를 조금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1주기 때 못 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영** 교육부차관님, 미래일자리특위 업무보고 전에 1·2차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일 공감을 얻은 얘기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창의성이 있는 인재,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인재가 제일 시급한데 그 대답은 ‘교육부를 폐지하는 거다’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고 공감이 들고 있어요.

차관께서는 대학에도 계셨고 또 지금 교육부의 차관으로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는 교육부의 역할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우리나라 전체적인 발전 과정을 보면 교육이 양적인 성장을 하면서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등교육부터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확대를 해 왔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실제로는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창의융합형, 문제해결형 그리고 정말 뭔가를 전체적으로 같이 생각하고 풀어낼 줄 아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교육부가

없어지면 될 거다'라는 의견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행히도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자유학기제가 굉장히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아마 몇몇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서 또 선생님들도 진도 부담에서 벗어나서 수업 자체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융합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유도했고 그게 다행히도 교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장 정동영** 여기까지 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마 오세정 위원님께서 나중에 또 질문하실 거예요.

다음 질의는 김한정 위원입니다.

**○김한정 위원** 경기도 남양주 을구 김한정 위원입니다.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김한정 위원**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올해, 앞으로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김한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육지책일 것 같은데……

감사원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고용한 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되고 한 1년 정도 되면 고용유지율이 46%로 떨어집니다. 특히 정부 청년인턴사업 고용유지율이 지금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정규직 전환금 지급이 정책의 실효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인턴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 그래 가지고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하면 개인적인 인센티브도 주고 그다음에 자산형성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 전환지원금 자체도, 그 제도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도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행을 해서 고용률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줄이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보면 창업지원사업 역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창업성공패키지 도입, 대학창업펀드 조성 이런 자금지원 위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썩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2014년의 경우 취업청년의 한 60%가 저임금 상태입니다. 월 최저임금의 한 150% 정도 수준인데 고용유지기간도 2013년 한 63% 정도, 결국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고용도 극도로 불안정한 이런 결과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창업 지원이 정책 틀이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단순한 자금지원 위주로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 저임금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없는 일자리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다른 대안 고민 더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물론 일반적인 일자리 문제보다도 청년실업 문제가 더 위중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부하고 저희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미스매치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미스매치를 해소, 연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청년의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제도 개선하는 중에 연결하는 저희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청년 일자리 관련되어 가지고 일자리 사업들에 대한 심층평가를 해 가지고요. 그것도 저희가 재정지원 사업이 그냥 흘러지는 게 아니고 조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좀 더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집중되도록 하는 나름대로 재정사업들에 대한 개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가 계속 더 노력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김한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인턴 문제인데, 공공기관에 특히 인턴으로 일하는 젊은이들이 다 갈망하는 것이 정규직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김한정 위원** 그런데 정규직 전환 실적이 지금 뭐 통계를 이야기하기도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5년 245개 공공기관에서만 한 3000여 명 청년인턴을 채용했는데 정규직 전환에 성공한 비율은 한 30.4%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가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제가 통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김한정 위원** 예.

그래서 기재부는 2013년 정규직 전환율을 50%로 하겠다 발표는 했는데 그 성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 정규직 전환율이 50% 이상 되는 기관은 한 45개 정도로 나오는데요. 그 정규직 전환한 기관조차도 청년인턴 채용을 한 기관 전체로 보면 한 18%, 20%가 안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실적이 낮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들 10명 중에 한 8명은 한 1, 2년 일하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임금도 인턴임금이라는 게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 있고요.

그러니까 근무하면서 결국 다음 일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업무나 자기의 전문성이,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시적 구직자 처지인 셈이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청년들에게 제시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임시적인 일자리를 자꾸 하는 것보다 지금 청년수당 등 새로운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김한정 위원** 좀 더 폭을 넓혀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 확인해 보니까 정부가 정규직 전환율 50%를 하겠다는 계획은 발표한 바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니까 그렇고요.

그 대신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을 해서 나름대로는 2011년에 15%였는데 2015년에 2배 정도 정규직 채용률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더 올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최근에 저희가 ‘고용디딤돌’이라고 하는 게 있

습니다. 그것은 채용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하는 인턴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대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영** 다음은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실장이십니까?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문기섭** 예.

○**백승주 위원** 제가 고용노동부 보고서를 보고 보고를 들으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을, 저도 정부에서 짧은 기간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지부동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듣기 조금 거부하시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결기가 가장 느껴져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힘쓰고 있는 것이 됩니까? 노동 4법 개정 아닙니까? 과건근로자법 개정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어요. 정면승부를 왜 못 합니까? 위원들 모아 놓고 이게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주장을 안 하잖아요.

물론 이것이 거대 정치쟁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 또 자기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장이 없어요.

보고 과정에서 왜 뺐어요, 일자리 창출하는 노동 4법 문제를?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문기섭** 사실은 군데 군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별도로 챗터화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는……

○**백승주 위원** 보세요, 이게 정말 전형적으로 복지부동입니다. 결기를 갖고 정면승부하세요, 일을. 이렇게 중요한 안을 피해 나가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최운열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한가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부처에 있는 분들도 일자리를 좀 치열하게 결기를 갖고 이 문제의 해법을 내놓아야지 현황 설명하고 그 대책은 조금 짧게 내놓고,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공정거래 하는 것이 일자리가 많이 나는 건지 불공정거래 하는 것이 일자리가 많이

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서는데요. 불공정거래 하면 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예.

○백승주 위원 이 과징금을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규칙은 만들 수 없어요? 5월만 해도 239억이 걷히고 있다고 나왔는데 이 과징금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백승주 위원 국고로 들어가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예.

○백승주 위원 그래서 공정·불공정이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준다면 이 과징금을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 또 전체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예.

○백승주 위원 금융위원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12년에 7800개의 금융직들이 15년에 7400개, 줄었지요? 400개 줄었는데.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예, 지점이 줄었습니다.

○백승주 위원 줄었는데 줄은 데 대한 대책이 그래도 금융 일자리를 어쨌든 좀 늘리겠다는지…… 그 대책이 됩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위원님,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수익성이 줄기 때문에 지점 줄이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백승주 위원 카카오금융 뭐……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그런 인터넷 전문은행도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용하는 거나 기술금융이나 이렇게 새로운……

오늘 계속 4차 산업혁명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과정에서 과생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더 잘 발현이 될 수 있도록 제도들을 고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 외에는 전통 쪽에서 이렇게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줄이는 부분을 저희가 막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백승주 위원 금융산업의 인원이 주는데 인원이 줄어들 게 그냥 두는 것을 추세적으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금융산업의 파생적인 직업을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중소기업청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업 기업과 창업도약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18년에는 35%까지 증대한다고 보고되어 있지요?

○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 김형영 예.

○백승주 위원 창업도약기의 지원이 이렇게 늘어나면 창업 기업에 대한 원래 지원이 줄어들니까,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 겁니까?

○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 김형영 줄여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약기 쪽을 강화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창업도약기, 3년 내지 5년 된 기업을 지원한다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 김형영 7년 된……

○백승주 위원 7년 하면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늘겠지요?

○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 김형영 성장이 중요합니다.

○백승주 위원 그래서 창업 기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새로운 예산을 마련해서 해 가겠다는 거지요?

○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 김형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부 위원들이 동물원이라고 비난하고 있지요? 비판하고 있지요? 들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미래부요.

동물원이라고 왜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아마 대기업에 종속되는 체제가 심화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보세요. 왜 동물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기본적으로는 혁신센터에서 창업보육 교육이 만들어지고 나서 결국에는 대기업에서 인수가 됐든 아니면 병합이 됐든 간에 대기업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또 대기업만 바라보고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만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 놓고 미창부에서, 저는 몇 군데 현장을 방문해서 봤어요. 잘 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 좀 더 관심을 갖고, 만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고 나서 그것을 일자리 창출, 산업 발전에 연결시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발전 방안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답변 모아서 해 주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부의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부처 간에 나누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13년에 구미·반월 공단 또 15년에 양산 남동 성남 하남 청주 익산 성서 이런 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현안을 파악하고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그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산업부, 중소기업청에 같이 요구를 드립니다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들 참여가 저조합니다.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걸 좀 더 확보해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벤처중소기업 고용 창출할 때 어떤 단위 요소별로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공청회 할 때도 많이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개인정보 규제 문제와 빅데이터 활용 문제가 상당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당겨서 빨리 만들어 줘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데 빅데이터 시대를 맞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진짜 시간이 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 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기 관련법을 조속히 만들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산업부의 리쇼어링 정책,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도 동기유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턴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강조함으로써 또 인센티브를 줘서 외국 나가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많이 신

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정 위원** 국민의당 오세정입니다.

제가 미방위 예결소위라서,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회의에 충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교육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영 차관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후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하게 돼 있지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교육부차관 이영** 예.

○**오세정 위원** 지금 시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시수가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초등학교가 2019년부터고 중학교가 2018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17시간, 그다음에 중학교가 3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최저 시간이고요. 실제 지금 현재 선도학교나 이런 데 가 보면 34시간이 아니라 68시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창체 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이런 쪽에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수가 좀 모자라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드립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그 시수 문제를, 이게 교과 과정을 바꾸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 수업시간 수를 늘리지 않으면 어디서 빼야 돼서 그게 항상 서로 문제잖아요.

지금 일단 그 문제하고 연결된 게 교사들의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은 공업이나 가사 쪽에서 많이 빼는 것 같고, 1시간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사 연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지금 충분하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지금 초등 쪽에서는 전체 교원의 30% 정도 되는 6만 명에 대해서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과거에 정보교사 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쪽

선택이 안 되면서 다른 과목으로 가 있었지만 지금 그분들을 다시 연수를 시켜서 이 과목을 담당 시키려고 합니다, 좀 업데이트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순증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차관 이영 연수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시간을 넣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배우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좀 큰 그림을 생각하면 소프트웨어 교육은 그중의 한 파트이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려고 그러면 학교 교육과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에서는 정답을 찾는 교육보다는 문제해결력을 계속 키워 줘야 될 것 같고, 토론식 교육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저는 대학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교육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수능도 좀 바뀌야 될 수도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팀이 있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실제로 따로 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조실에서 관련해서 지금 보고서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 내에서 토론회도 하고요, 밖의 의견도 정책위원회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게 땀질식이 아니라 어찌면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특히 평생교육 같은 것은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텐데, 지금 선진국 일부에서는 40대에 의무교육 새로 한번 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빨리 발전하면서 옛날 지식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지금식의 그냥 적당한 교양식의 평생교육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교육부가 지금 학교 교육에서의 방법, 그다음에 평가하는 방법, 하다못해 학제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게 저는 크게 보면 95년에 5·31 교육개혁 이후에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아주 그만큼 대규모의 캄프리헨시브(comprehensive)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당장은 임프리마터(imprimatur)가 안 되더라도 교육부 폐지를 포함해서 같이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 그게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질문 다 하시면 제가 마지막에 답변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하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실제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전체의 재정 지원 방식을 바꾸는 걸 7월 중순에 발표드린 적이 있고요. 또 지금 초·중등 쪽에서 지능정보사회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정책토론회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 쪽에서 11월 중순쯤에 하는 것하고 얹혀서 같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 주시고 있는 전체 큰 변화와 맞추어서 초·중등, 대학의 변화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자유학기제 해서 단추가 좀 끼워져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예, 그것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다음에 2015년에 80% 중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경험을 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는 게 2018년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적용되는, 고등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개정 교육과정이 실제로 자유학기제 수업 방식에 있는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범위는 줄이고 문제해결형으로 가고 융합형으로 가는……

○오세정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사실은 제가 관여를 해서. 이게 교사들이 바뀌지 않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교사를 바꾸는 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최상목 기재부차관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벤처기업가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연간 1억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면세 기준이. 이게 지금 너무 적다, 그러니까 사실은 벤처 하는 사람들의 로망은 그걸로 커다란 대박을 치고 크게 부자가 되는 걸 바라는 건데,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세법 개정을 통해서 3년 간 5억, 이것도 아주 큰 것은 아니라서……

여기 답변을 보니까 대부분이 그 범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벤처를 하겠다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꿈을 키워 가는 건데 이게 1년에 1억, 아니면 3년에 5억 이것 가지고는 애들이 꿈을 안 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한정적으로 꼭 운영하셔야 되는 건지, 이걸 범위를 늘릴 수가 없는 건지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원래 벤처는 적격 스톡옵션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로 하니까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오세정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걸 양도소득세가 되니까 과세 시점하고 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행 제도가 약해서 벤처업계하고 수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다가 전격적으로 3년간 5억이라는 게…… 3년간 5억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벤처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갖기 때문에 결국 1년에 5억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한 5배 정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걸로 벤처 업계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또 이 부분들 미진한 걸 좀 더 확대하는 걸 하더라도 당장은 그렇게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업계랑 얘기한 결과로 개선을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시행 성과는 한번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세정 위원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박경미 위원께서 먼저 해 주시지요.

○박경미 위원 이영 차관님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에 PRIME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게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서 학과 계열 정원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공계 강화로 작용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CORE라는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이것은 아무래도 인문학 육성, 융·복합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PRIME과 CORE가 상충되는 것 아니냐라고 강변을 하고는 계시지만 여전히 저는 그 목적이나 취지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물론 둘 다 유의미한 사업이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이 두 사업이 한 대학이 동시에 선정되기는 어렵겠지요. 그리고 사업상 공고 초기에는 둘 다 지원할 수 없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향점이 다른 PRIME과 CORE를 동시에 석권한 대학이 네 곳입니다. 이화여대, 한양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이렇게인데요.

우선 이화여대는 요즘에 ‘순실여대’로 불리지요. 정치 이슈의 중심에서 있고 또 교육부의 주요 재정 지원 사업 9개 중에서 8개를 해서 최다 선정이었고 178억 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문체부 1인자로 불리는 김종 제2차관, 한양대 교수셨지요. 현재 최순실 게이트에서 키맨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경북대·대구한의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TK지역 대학이지요.

그래서 이 네 대학을 보면 뭔가 합리적 의문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대학들이 PRIME·CORE 동시 선정 수혜자들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워낙 오비이락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오비이락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애써서.

그런데 CORE가 인문학 육성, 그다음에 융·복합 인재 양성 또 국적 없는 그런 퓨전학과들을 양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혹은 경제성 있는 인문학이든 혹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인문학이든 인문학의 본질을 잘 살리는 방식으로 이 사업이 전개될까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전체적으로 PRIME사업과 CORE사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리한 것은 PRIME 대형의 경우에는 그 자체 안에 CORE사업을 품고 가는 것으로 했고요. PRIME의 소형의 경우에는 CORE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제로 두 가지 사업들이 고유한 목적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평가하는 위탁기관, 평가지표 그다음에 위원들 선정하는 것 전부 다 독자적으로 합니다. 저도 그냥 결과만 받아서 보지요, 실제로 이런 것에 우리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PRIME·CORE 동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대형을 PRIME을 가져갔다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CORE사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어학이나 철학이걸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융합하거나 지역화하거나 아니면 정말 학문 후속 세대를 하거나 다른 그러한 방향에 좀……

**○박경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에 대한 VIP의 관심이 아주 각별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경북은 삼성, 대전·세종은 SK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센터의 건립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전담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 계속 받아왔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창업보육센터가 창조경제혁신센터보다 훨씬 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1,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게 고용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계신데 자료 3쪽에 보면 고용지원예산 주요 사업 중 첫 번째 대표적인

청년 채용의 날 보면 97회를 개최해서 1487명의 구직자가 참여했고 261명이 채용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얼핏 들으면 꽤 괜찮은 수치 같지만 한 번에 14명씩 구직자가 참여했고요, 회당. 그다음에 한 번에 한 2, 3명씩 채용이 됐거든요. 참 미미합니다. 물론 시작은 미미하고 끝은 창대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지역별 전담 대기업이 어떤 절차로 선정이,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경련이 명단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미르·K-스포츠 테자부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각 기업의 강점 또 지역특성 간의 결합 가능성보다는 프로야구구단 연고지 혹은 기업의 지역사업장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점이 잡혀 있는 기업들에 할당이 된 경향이 있지요. CJ 이재현 회장, 효성 조석래 회장 이런 식으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나중에 답변……

**○위원장 정동영** 더 하세요.

**○박경미 위원** 대기업들이긴 하지만 한화 김승연 회장, SK 최태원·최재원 수석부회장 이런 식으로 뭔가 약점이 잡혀 있는 기업들에 강제적 할당이 됐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지역별로 사단병력 주둔시키듯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재벌들한테 맡기면 재벌들이 과연 키워주겠느냐,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삼성혁신센터가 결국 삼성지원부대가 될 것이고 재벌 중심 경제구조만 더 고착화시키는 기지 역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 계속 나왔지만 저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싶은 게 다음 정권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계속될까요? 미래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2014년 9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설립과정에서 혁신센터의 사업설계 같은 부분들을 지자체, 전담 대기업과 함께 설계를 같이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참여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전경련을 통해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창업거점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라 그래 가지고 대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장점이라든지 인적·물적 자원의 장점을 이용해서 지역기업의 혁신과 창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체계로 만들어져 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본적인 특징점이라고 하면 대기업이 참여했다는 것, 아까 엔다우먼트(endowment)에 해당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구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한 자리에서 기존에 제공할 수 없었던 윈스톱 서비스라는 것들을 멘토링부터 마케팅 기능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작부터 글로벌을 지향하는 테크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신 지역이 있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실제 가보시게 되면 그쪽의 창업 열기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미래부로서도 다른 부처와 함께 협력을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창업을 아이디어 단계서부터 글로벌 성장기업까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그게 다음 정부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순서는 박정 위원님입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오전 주질의를 못 하신 김성태 위원님……

○이완영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정동영 먼저 하시겠어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간사로서 늘 우리 특위의 무거운 압박감을 많이 갖습니다. 특위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성과물을 도출해내야 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오전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도 협조를 해서 국회와 함께 현재의 일자리 문제 해결 그리고 미래 일자리를 같이 만들어 내야 되는 공동운명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위원장님께도 제가 당부드리면, 우리 위원들도 이런 문제 지적보다는 우리가 어떤 과제를 도출

해낼 건가 이런 위주로 위원들이 활동해 주실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방금 간사님들 간에도 협의를 했듯이 우리가 특위 끝나고 나면 ‘일을 뭐 했는가?’ 다른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자신 있게 뽐뽐하게 내보낼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부차관님 계속 계십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이완영 위원 대학의 커리큘럼 이런 것은 간섭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 자율입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출석 같은 것도 교육부에서 대학에 정해 주는 게 없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기본적으로 훈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기는 얼마 해야 되고 학과는 얼마 해야 되고 이런 것……

○교육부차관 이영 그렇게까지 아주 상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완영 위원 출석은 제한을 두고 있고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출석에 대한, 얼마 이상을 해야 된다는 조그은 선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완영 위원 이제는 그러면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학과나 운영에 대해서 크게 간섭하는 게 없나?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4차 산업 관련해서 학제개편 이런 것도 연구하나요, 6·3·3·4?

○교육부차관 이영 예, 과거에 좀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당긴다든가 3월 학기를 9월 학기로 보낸다든가 이런 연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좀 당겨 가지고, 요즘 입학연령도 그렇고 또 한 학년을 뛰어넘는 문제부터 해서 다양하게 그런 것을 도입해 가야 우리가 4차 산업에 적응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러니까 그간에도 실제로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라에서 제일 많이 걸린 게 입시 관련된 게 결국은 마지막에 애로사항으로 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당기다 보면 마지막에 조금 더 경쟁률이 높아지는 해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유·불리가 생기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저희가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완영 위원 제가 석학은 아니지만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도 미래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서 어떤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4차 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산자부하고 중기청!

지금 우리 과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유턴 기업,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베트남에 삼성전자가 몇 만 명입니까? 1만 8000명입니까? 몇 만 명이지요?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원동진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

○이완영 위원 그게 절반만 우리 한국으로 와도 대한민국에서 1만 명이 고용된다, 쉽게 이런 말을 씁니다.

일본도 이미 성공했지요. 아까 보고에는 미국도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유턴기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획기적인 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원동진 예.

○이완영 위원 세제…… 아까 세제 이런 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환경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원동진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 소득세, 관세,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그다음에 인력 지원, 일부 병역특례나 입지 지원 이런 것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땅값도 싸게 주는 지원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지요?

우리 특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টে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할게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는 저는…… 안철수 위원도 어떤 발언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데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계속…… 여러 가지 세계모텔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기업 낀 데도 있고 안 낀 데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로 미래부에서 계속 잘 이끌어 가면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동영 예.

○박정 위원 여기 특위라는 것이 각각의 상임위에서 물어볼 것도 있지만 여러 부처에서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물어볼 내용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과거를 보면서 앞으로, 미래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과거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미래 일자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이 발언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걸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 막중하지 않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시간들 내서 공부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동영 박정 위원님 발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金成泰 위원 우선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증인 여러분들께서 제가 미방위 예결소위 관계 때문에 좀 늦게 온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사회 변화속도, 기술 변화속도는 너무나 빠르는데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나 준비가 여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 하는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의 물결,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을 이미 2009년도에 제가 제시하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제3의 물결은, 3차 산업혁명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왔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 준비도가 다보스포럼의 1월 달 발표를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관련부처와 위원회가 와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러한 변화속도에 대해서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기술 변화, 기술 인프라의 확산과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그 규제나 제도는 옛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는 각주구검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된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초기에 여러 가지 ICT 인프라나 이런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상당히 진전을 시켜놓고 그 위에서 상당히 누리는 거대한 포털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대 포털사업자들이 지금 아무런 제재 없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여러 곳에 가면 그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들이나 중소기업자들이 폐업, 도산하거나 사업 규모가 영세해지면서 파산, 실직, 해고 또는 일자리 상실·감소, 고용안정성 위협 이런 여러 가지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 지배력과 자본을 앞세운 거대 포털에 중소기업자들이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사업자들이 인접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 것 자체를 저희가 직접 공정거래법으로 문제 삼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金成泰 위원** 중소기업자들의 피해사례도 많이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예.

○**金成泰 위원**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옛날 산업사회의 룰을 그대로 가지고…… 공정거래의 시각도 상당히 바뀔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거대 포털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지배력 남용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떤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게끔 무마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공정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룰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하고는 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이런 행위는 당연히 저희 공정거래법으로 규율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 보호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공정거래법으로 다루기 보다는 중소기업 보호나 동반성장 이런 측면에서 다뤄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하신 답변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인접시장 진출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대 포털의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적을 받은 결과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인정은 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예, 뭐 관련 시장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렇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 포털의 사업영역 확장에 대해서 인접시장 진출을 우리가 직접 규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예, 맞습니다.

○**金成泰 위원** 현재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金成泰 위원**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저희가 보는 것은 만약 그 인접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그런 건 당연히 저희가 규율해야 되는 문제고요. 또 이제 진입한 이후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도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그것은 골목상권 보호, 그러니까 동반성장이나 중소기업 보호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成泰 위원** 그러면 뭐 양심에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아니요, 그것은 뭐 다른 관련 부서에서 대책은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金成泰** 위원 여기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부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소관이 아니다. 다른 부처가 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국민들의 아픔이 있을 때는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와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공공의 도리가 아닙니까? 정부의 도리가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위원님,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것으로 들리셨다면 그건 죄송하고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희는 아무튼 공정거래법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 또 불공정행위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金成泰**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세요.

실태조사나 조치를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네이버하고 다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거래법을 들어서 동의 의결하는 조치를 한 적이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인접시장에 진출하는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저는 공정위를 비롯해서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에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미래 지향적인 조치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따라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상당히 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미리 미래 지향적인, 좀 미래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대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영선**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청이나 동반성장위원회 이런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成泰** 위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요.

시간을 더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동영** 예.

○**金成泰** 위원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여기 와 계십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예, 사무처장입니다.

○**金成泰** 위원 제가 금융위원회도 비슷한 흐름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글로벌하고 경쟁할 수 있는 핀테크 사업자가 있습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최근에 아주, 그래도 좀 새롭게 결제나 이런 서비스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파악할 때는 물론 예비 인가사업자 K뱅크나 카카오뱅크 이 두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연내에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金成泰**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스마트 인프라의 발전속도나 또 금융의, 우리 경제력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의, 제가 알기로는 100대 핀테크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현재는 그렇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살 것이 이러한 새로운 스마트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金成泰** 위원 금융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혈액이고?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예.

○**金成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보면 명동에 가면요 중국의 핀테크 업체들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금융의 흐름을 전부 다 흡수해 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상당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뭔가 새로운 융합을 통해서……

○**위원장 정동영** 마무리해 주시지요.

○**金成泰** 위원 예.

이걸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것은 심

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 하셨는데 이렇게 국경이 없이 서비스는 이동을 하고 있고 규제는 아무래도 각 나라 사정에 맞도록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소유 제한 같은 걸 좀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문제를 정무위 위원님들과 마침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成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미래부도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예, 그렇습니다.

○**金成泰 위원** 미래부 방통위 금융위원회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융합인재가 고용노동부에서 창출이 되는 거고 이러한 생태계를 계속해서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인 개방·공유와 협력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걸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가 걸쳐 있어서 좀 답답해하실 텐데, 저희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처들이 걸쳐 있는 문제를 지금 해법을 내고 있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행정자치부 방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같이 하면서 약간 더더 보이겠습니다만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成泰 위원** 조금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국 제가 점점해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하나는 제도적 준비, 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 그다음에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일단 제도적 측면에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융합 혁신산업으로서 핀테크나 이런 것들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안이 이런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예, 꼭 필요합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외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예.

○**金成泰 위원** 이것을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분야의 활로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1순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중요한 게 노동의 유연성일 겁니다. 노동의 유연성이 가장, 우리나라가 82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월드이코노미포럼 발표자료 8월 달에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으로 갈 수 있는 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문기섭** 지금 그런 차원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정규노동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수량적인 측면에서 조금 유연하지 못하고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근로시간이라든지 일하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노사 관행을 고치기 위한 노력과 같이 또 법제를 고치기 위한 노동개혁 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영**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우리 박정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 파주출신 박정 위원입니다.

우리 국회 내에 많지 않은 이과 출신들이 계신데요. 우리 오세정 위원님이나 문미옥 위원님은 물리학을 하셨고 그리고 안철수 위원님은 의학을 하셨습니다. 옆에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은 기초학문인 수학을 하셨고요.

저는 바이오 쪽으로 해서 유전공학을 한참 80년대에 붐이 불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오가 지금 다른 IT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

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에 있어서 대기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들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앞으로의 신성장동력을 바이오 쪽으로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바이오 분야에 대한 문제점이 몇 개 있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산업 투자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술 R&D 투자액은 IT나 NT에 비해서 각각 21.9% 그다음에 57.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벤처투자는 투자의 근본취지가, 창업 초기에 대한 기업 지원이 중요한데 초기 투자에 대해서는 12.3%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성과 부분에서는 정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특허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세계 4위로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관련 논문 점유율이 12위에 그치고 국내 타 분야에 대한 특허 성과는 6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많이 인식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근본적으로 보니까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숙련된 생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절실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부가 2014년부터 연간 80명씩 의약품 제조관리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정부하고 바이오기업이 막대한 재원을 R&D에 투입한다고는 하지만 성과가 적은 것도 역시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관련된 기재부나 교육부 그다음에 미창부 그다음에 우리 산업부가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바이오산업의 시장규모가 2014년에는 369조 원에서 향후 2019년에는 488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발표한 바이오산업 실태를 보니까 국내 바이오사업 수급규모는 9조 원밖에 안 됩니다. 참 미미하기 그지없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미래산업에 대한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해들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바이오 부분에서도 곤충 산업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는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애완용이나 학습용 위주로 가고 있지만 이게 식품이라든지 약품으로 바뀌게 되면 많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잘 아시는 것처럼 2050년에는 세계인구가 96억이나 되는데 이 96억 명이나 되는 인구가 지금보다는 식량소비를 2배나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식량보다는 동물에 관계된, 육식에 대한 소비의 문제가 생길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농경지의 70%가 가축 사육을 위한 목초 재배에 쓰일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1kg을 생산하는 데 가축 같은 경우에는 8kg의 사료를 먹어야 되지만 곤충은 2kg면 충분하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유망직종이 되고 미래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농림부만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우리 미창부라든지 기재부의 지원 그다음에 그걸 산업화시키기 위한 산업부나 그다음에 우리 중기청 같은 데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미래 먹거리 중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항천 분야인데 항공대학은 전국에 몇 군데가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항천 분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항공대학이 아닌 항천대학을 같이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쉬운 것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박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이오 분야가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IT에 못지않게 될 수 있는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동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도 동감하는데요.

그런데 좀 살펴보면 국내 바이오산업의 성장률은 세계 성장률하고 비슷합니다. 세계가 7.2% 성장인데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 7% 성장해서 같은 수준으로 가고는 있는데 국가 R&D 투자 규모라든지 의료서비스 수준 등에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 산업의 비중이 너무 미미합니다. 한 2.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서 그게 문제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가 바이오의 가장 큰 분야인데 세계에서 제일 일등으로 가는 기업이 존슨앤드존슨인데 그 기업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일등 하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0분의 1밖에 안 돼서 너무 세계시장을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진입해 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상위 20개 제약기업이 전 세계 매출액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도 120억 달러를 넘기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R&D 투자만 하더라도 노바티스라는 기업 하나가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국내 10대 기업 합해서 전체로 한 게 6700억 정도 되는데 노바티스 혼자서 R&D 투자한 게 11조나 됩니다. 이쪽은 주로 R&D로 가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로서도 R&D라든지 세제, 펀딩, 인프라 이런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만 하여튼 집중력을 가지고 꾸준히 양성하지 않으면 워낙 축적된 인프라라든지 인력이 선진국은 너무 많아서 이런 분야는 특단의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곤충산업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산업화에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기재부차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산업부나 그다음에 복지부 등 관련부처하고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단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신성장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중 11개 신성장산업 중에서 바이오하고 바이오헬스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신약개발 같은 경우에도 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임상 1·2상 된 것을 국내수행 임상 3상도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제 지원 부분도 지금 하기로 했고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곤충 관련된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식품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농림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이게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정 위원** 교육부 답변도……

**○교육부차관 이영** 바이오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보다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BK사업이나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이나 아무튼 간에 기업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신경 쓰고 그쪽에 좀 더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천대학이라는 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조금만 위원님께서 설명 주시면……

**○박정 위원** 항공은 비행기에 대한 거지만 항천은 인공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그걸 통해서 많은 기초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파생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인 우주선 보내고, 다른 나라는 위성이 가서 광물을 채취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학제부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미래부가 조금 더 관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정 위원** 제가 마무리말씀 좀……

**○위원장 정동영** 예.

**○박정 위원** 그래서 똑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게 산자부에서 정만기 차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90년대 벤처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 8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투자를 좀 더 잘하고 연구 R&D를 지원했다면 지금쯤 선도국가가 돼서 갈 수가 있었다, 바이오시장이라는 게 한번 성공하고 나면 규모도 크고 이익도 크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4차 혁명을 맞이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곤충산업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지금 각 경쟁을 벌일 시기에 조금 더 선도적으로 R&D라든지 여러 투자, 세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주도해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동영** 이제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인

데요.

오세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오세정 위원 예.

○위원장 정동영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항천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 미래일자리특위가 다음 달에 학습시찰로 중국 천진 앞에 있는 빈하이특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IT를 비롯해서 바이오, 나노, 우주항공 등 눈부신 중국의 발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푸둥지구의 6배 면적에 달합니다, 서울의 한 5배 면적쯤 되는데요. 거기서 지금 에어버스를 생산하고 있고, 중국의 자체 기종을 개발해서 여객기를 생산해서 출시하고 있어서, 언젠가 아마 멀지 않아서 우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국에서 만든 여객기를 사다가 우리가 타고 다닐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 분야에 앞서가고 있는 중국을 좀 잘 쳐다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세정 위원님.

○오세정 위원 아까 기재부 최 차관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다가 시간이 없어서 끝냈는데요. 스톡옵션 거기 세금 이것을, 그러니까 3년간 5억 원 이하로 바꾸기는 했는데 실제로 스톡옵션 관련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비중이 큼니까, 얼마나 견디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것은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한번 확인해서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이게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실적은 지금 현재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많지 않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오세정 위원 이게 사실 제가 벤처를 창업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넥슨 이런 것 나올 때 그 1세대 벤처들 그 사람들은 대개 대기업에 있다가 나와서 벤처를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거의 성공하는 벤처가 안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기업에서 나올 인센티브가 많이 줄었다, 이 스톡옵션이 좀 제한적이라서.

그래서 저는 대기업에 그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뛰어나올 수 있게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세수에

커다란 변화가, 큰 부담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또 스톡옵션에 관계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받은 후 2년 이상 근무할 것, 1년 동안 취직을 보류할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과감하게 풀어서 인센티브를 사람들에게 많이, 미래 창업주들한테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단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그게 인센티브가 되려면, 사실은 스톡옵션에 대한 인센티브의 이슈가 아니고 이 투자벤처기업이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게 얼마나 평가를, 과거와 같이 대박을 치는 사례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도상으로는 사실 미국도 10만 불이고 일본도 1200만 엔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스톡옵션 관련된 것이 좋은 사례도 있었지만 또 부정적인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도설계 자체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2년하고 1년 말씀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스톡옵션의 취지 자체가 근로의욕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또 결국, 그런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제한 자체를 두지 않는 것도 또 문제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충분히 유념을 하고, 벤처업계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사실은 이게 외국하고, 지금 1억 원 자체도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업계에한테 여쭙봤더니 ‘1년에 5억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그게 그러면 우리가 제도상으로는 약간 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있는 제도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드려보자 그래서 한번 이게 활성화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전향적인 것 같고, 지금 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예,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금융위 관할인지 혹시 기재부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액면가 주식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금융위 관할 인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상법 관련 같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래서 무액면가가 도입이 되기는 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무액면가 주식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거의 액면가로 돼 있어서, 주식 재산권 이런 것도 커다란 자본인 현대 사회에는 잘 안 맞는다,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또 벤처업계들 요구사항 중의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상법은 바뀌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글썽요, 제가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결국 사실 또 시장에서 좀 수용이 돼야 되거든요. 지배구조나 이런 문제도 있고, 선의로 하실 사람도 있지만, 그게 사실은 상법이 도입됐지만 아직도 실행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데, 각각 거기에 관여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어떤 합의가 잘 안 됐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저도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벤처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 중의 하나다라는 얘기를 해서.

미래부 조정관님께 여쭙 보겠는데요, 사실 아까 빅데이터,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당연히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나 위치정보 이런 것에 굉장히 제한이 많아서, 이게 사실은 행자부 관할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행자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그쪽 소관입니다.

○**오세정 위원** 그거지요. 그렇지만 제가 행자부에 지난번에 공청회 있을 때 가 봤더니 행자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맞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오남용되지 않게 막는 게 좋겠다는 그게 제일 큰 인센티브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빅데이터산업, IoT 이런 걸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텐데, 그래서 미래부에서 행자부하고 어느 정도까지 협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설득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지금

수시로 만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를 해결해야 합니다. 재식별의 문제라든지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문제,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예외조항을 둔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처벌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들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정기적으로 저희 쪽 빅데이터 담당하는 곳과 행자부 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위원님, 그건 방통위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프라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행자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지고 규율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나 위치정보 보호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빅데이터, IoT다 해서 개인정보의, 지금 그동안 저희가 사고가 많이 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보호 쪽에 대개 치중을 한 감이 있고, 국회에서도 계속 법률개정을 통해서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활용이 아주 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행자부, 저희 방통위, 여기 미래부, 금융위 다 모여 가지고 비식별 조치를 할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좀 유연하게 가져가는 등의 가이드라인 통합해설서 이런 것들을 6월 말일 자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앞으로 거기에 걸맞은 법률개정까지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방통위에서 정보통신망법이나 위치정보 보호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이드라인을 6월 달에 바꾸셔 가지고 이걸 바이패스(bypass)하려고 그러시는데, 원칙적으로 법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공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터파크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이 유출돼 가지고 사람들의 인상이 굉장히 나쁜데, 이것은 관리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법의 문제보다도. 그래서 있는 법도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강하게 하더라도 이게 데이터로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미래부나 아니면 방통위나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예측 중의 하나가 노동력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으니까 선진국 쪽으로 다시 공장들이 돌아올 거다, 리쇼어링할 거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가 아디다스가 그동안 중국에 있던 공장을 폐쇄하고 전부 다 독일로 다시 돌아갔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노동력, 싼 임금 가지고 하는 산업들은 굉장히 앞으로 약해질 것 같은데, 한국도 그동안 싼 임금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하는지 산자부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업들을 한국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고 이게 잘 작동을 하는지, 잘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어떤 제도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관여를 하시나요?

**○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 김형영** 아주 제한적으로 일부만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그걸…… 제가 조금 보완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러면 정만기 차관님,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외형적으로는 입지할 때 임금, 세율, 입지 같은 것을 외국인투자에 준해서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있고 캐시도 제공해 주고 이런 제도는 있는데 그런 제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리쇼어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플렉서블한 노동환경, 그다음에 또 수학이라든지 공학의 유능한 그런 인재들,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같은 이미 엔지니어링이 제대로 된 공장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전통적인 노동집약방식에 의한 생산방식을 완전히 정보화·자동화에 의한 물리적인 가상공간이 통합된 첨단화된 생산시스템, 이런 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유턴 리쇼어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작은 제도개선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중소기업들, 주얼리라든지 이런 데가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삼성이라든지 큰 대기업들의 나갔던 공장들을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국내의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정 위원** 어떤 환경을 개선하셔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교육환경, 여기 여러분들이 다 지금 나와 있는 게,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기본에 충실한 교육, 특히 수학·공학 그런 교육이 계속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도 상당히 유연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생산성보다도 되게 높은 임금……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금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노동자들은 9000만 원 이상으로 월급을 받고 하다 보니까 하청근로자가 생기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계속 생기고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베트남이나 미국이나 멕시코로 계속 투자가 나가서 결국 금년에는 이미 해외생산이 500만 대, 국내생산 400만 대로 국내생산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는 한 나갔던 기업들을 불러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개선되는 쪽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정 위원** 중기청 좀……

**○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 김형영** 지금 산업부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틀을 적용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산업부와 협업을 하겠고요.

다음에 오늘 회의 전에 미래일자리특위에서 제안하신 게 국내 복귀 기업을 위한 R&D사업이 아주 작게나마 있었는데 작년에 중단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제안이 있었습시다.

작년에 4개 사를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복귀 기업에 대해서, 역량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좀 수요가 부족해서 사업을 중단했는데요.

앞으로 우수한 기업의 수요 발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라든지 특성 등을 심층 분석해 가지고 다시 재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영 박경미 위원님, 어떻게 한 번 더 질의하시겠어요? 안 하셔도 되겠어요?

우리 박정 위원님도?

○박정 위원 예.

○위원장 정동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 9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와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9개 부처의 보고와 질문 답변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관련한 부분적인 처방, 미시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은 보입니다만 좀 더 담대하고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범정부적인 설명 노력이 좀 배가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완영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위원님들 질의 취지에 맞도록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업무현황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정부부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최 상 목  
미래경제전략국장 백 용 천

교육부

차 관 이 영  
대학정책실장 배 성 근  
교육과정정책관 남 부 호  
대학지원관 송 용 배  
평생직업교육국장 홍 민 식

미래창조과학부

제 1 차 관 홍 남 기  
창조경제조정관 고 경 모

산업통상자원부

제 1 차 관 정 만 기  
산업정책관 원 동 진

고용노동부

차 관 고 영 선  
고용정책실장 문 기 섭  
직업능력정책국장 권 기 섭

방송통신위원회

상 임 위 원 이 기 주  
이용자정책국장 박 노 익  
공정거래위원회 신 영 선  
사무처장 김 용 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 형 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윤영석	추경호	새누리당	2016. 9. 13.

○출석 위원(14인)

김 석 기 金成泰 문 미 옥 박 경 미  
박 정 백 승 주 서 형 수 송 희 경  
오 세 정 이 완 영 이 종 배 정 동 영  
최 운 열 추 경 호

○청가 위원(1인)

이 만 회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광 목  
전 문 위 원 조 의 섭